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2016. 10. 13(목) 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개회식 (10:00~10:15)

개 회 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 및 토론 (10:15~12:00)

사 회	고기석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발 제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정책방향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의 관점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금현섭 서울대학교 교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토 론	객석 질의응답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9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13	격려사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9	발제 1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정책방향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25	발제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의 관점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47	발제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금현섭 서울대학교 교수
69	발제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개회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국정감사로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신 정미라 가천대 교수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금현섭 서울대 교수님,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의원 보좌진, 학계, 관계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으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2차에 걸쳐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정책방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경험한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OECD의 11개국이 초저출산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모두 극복하였으며, 현재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

와 국회, 국민이 힘을 모아 저출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의 제목인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는 저출산 해결의 ‘길을 찾고 있다’는 의미와 지혜를 모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발제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10. 13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격려사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의 수가 20대 중후반 산모의 수를 추월하였고, 초혼 평균연령 또한 3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0년 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고, 80조가 넘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가 과연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지, 또한 가족 친화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대한 인식은 또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연결고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콜로키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실천방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10. 13.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발제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발제 1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정책방향

—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진단: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전의 인구정책

- 현재까지 negative legacy를 지니고 있는 요인 중심으로

a.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 가족계획정책의 대상: 합계출산율 only
- 실제 출생아 수 및 성비가 고려된 인구재생산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인구에는 사망과 이동이 포함되며, 특히 출산력의 변천과 사망력의 변천이 서로 연동됨을 간과

--->> 현재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에 영향 (1980년대 생 출생아수 감소)

b. ‘현재형’ 인구정책

- 오늘의 인구변동은 한 세대 후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간과
- 오늘의 합계출산율만에 집중한 인구정책

--->> 25-30년 뒤 출산아 수를 당시에 태어난 여아의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을 간과

c. 가족계획정책 중단의 실기(失期)

-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 무시 혹은 무지(無知)
- 관련 조직의 관성(慣性) 무시

--->> 일본은 이미 1980년대 1.5대의 합계출산율 진입 및 1989년 1.57 쇼크 발표

d. 정부 및 정치권의 '인구' 경시(輕視)

- 가족계획정책 중단 이후 인구관련 부서의 부재 (1997-2004)
- 정부 조직 내 인구관련 전문가의 부재
- 인구변동에 무(無)대응 혹은 늦은 대응

--->> 2000년 이후 급락한 출산율에 초동대처 실패 및 인구정책관련 조직 마련의 지체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의 인구정책

a.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 실제 인구를 구성하는 것은 출산율이 아닌 출산아 수
- 분모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 같은 출산아 수에도 출산율 증가 가능
- 인구정책의 목표는 언제나 합계출산율
- 출산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것

b. 현재형 인구정책

- 올해의 출산율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예: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대책)
- 오늘의 아동인구는 15-20년 뒤 entry노동시장 형성
- 오늘의 아동인구가 가임기에 들어섰을 때의 출산율 및 출산아 수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c. 정부 및 정치권의 '인구' 경시

- 계륜(鷄肋)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입으로만 중요했던 저출산
- 저출산 관련 예산에 대한 무관심

d. 스웨덴 프랑스 바라보기

- 출산, 인구의 구조, 복지의 역사 등에서 토양이 다른 스웨덴, 프랑스가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 매달려 옴
- 정부와 국회의 두 나라에 출장 간 횟수?
- 왜 출산정책이 복지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부재

e. 저출산 정책 주무부처의 인구에 대한 몰(沒)이해

- 출산력 분석 능력이 부재한 주무부처
- 1개 국책연구소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 정책의 마련도, 정책의 평가도 한 기관에서
- 인구통계의 달인(達人) 통계청과의 협조 부재

f. 의견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저출산 정책들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에서의 미흡함
-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는 누구인가? 의견의 기반은 무엇인가?
- 정책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의 부재

g. 저출산 관련 정책연구의 부재

- 0에 가까운 저출산 연구예산
- 1개 국책연구소, 정말로 정책연구를 위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 우리는 저출산 관련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근시안적 현상 이해 (예, 해남군의 출산력, 교육부의 대학 정원 조정)

h.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책연구소?
- 부처마다 진행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예산의 낭비
- 출산율 회복이 안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2. 어떠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가?

(1) 출산이 아닌 인구정책의 밑그림 마련

-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개념 혹은 철학이 필요
- 오늘 내일의 출산을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필요
- 다운사이징 전략이 필요한가? 무조건 인구의 크기를 유지해야 하는가?

(2) 인구연구의 토대 마련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국책 연구사업이 필수
- 단기 연구에서 벗어나 장기 지속 연구의 토양
-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수

(3) 정부 내 인구전문가 필요

- 인구 분석 및 평가는 일반행정직 직원의 역량을 벗어난 분야
- 인구는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 기획에 기본적인 요소
- 중앙은 물론 각 광역자치단체에 인구정책전문가 TO 필요

(4) 컨트롤타워로 일원화 된 인구정책

-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
- 국회의 초당적지지

저출산, 정말로 심각한가? 아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가?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발제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의 관점에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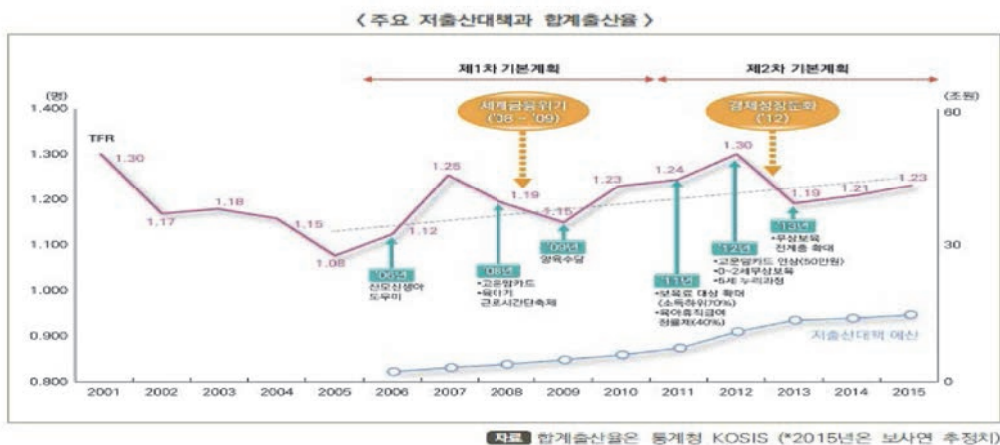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저출산 대책 평가

- 제1,2차 저출산 대책(2006~2015년)
 -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초점, 총 80.2조원 투입



- 합계출산율 2005년 1.08명→2015년 1.24명 소폭 증가.
 - But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미만) 지속.
 - cf.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 혼외 출산율이 2.1%(2012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한국에서,
 - 합계출산율은 기혼여성 출산율과 결혼율 두 요인에 좌우됨.
 - 기혼여성 출산율은 소폭 증가(1.22→1.46), but 결혼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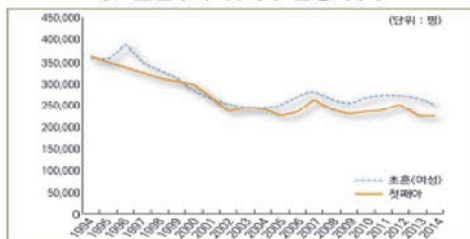
만혼·비혼과 출산율과의 관계

- 만혼·비혼화에 따른 결혼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초래

* 초혼연령 변화 : ('03) 男 30.1세, 女 27.3세 → ('14) 男 32.4세, 女 29.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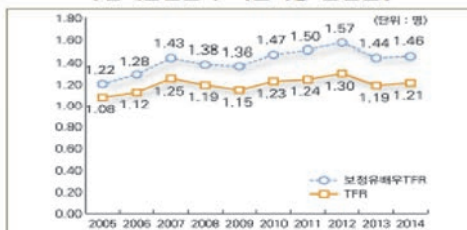
	기준연도 TFR	비교연도 TFR	기간 TFR 변화	요인별 분해	
				기혼여성 출산율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효율을 유지 가정)	결혼율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효율출산율 유지 가정)
2005~2014	1.076명	1.205명	0.129명	+0.717명	-0.376명

〈 초혼건수와 첫째아 출생아수 〉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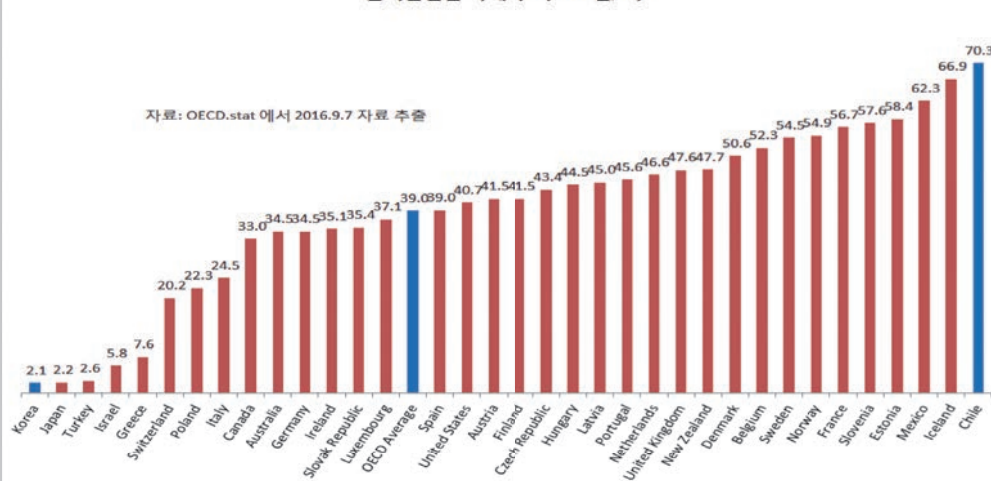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



자료: 초저출산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보사연, 2014)

혼외출산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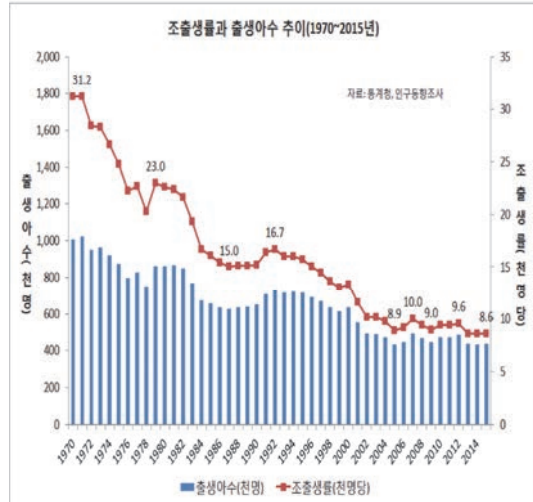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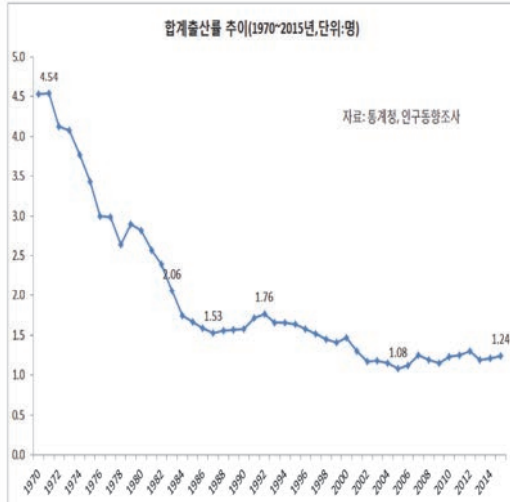
혼외출산율 국제비교(2012년, %)



자료: OECD.stat 에서 2016.9.7 자료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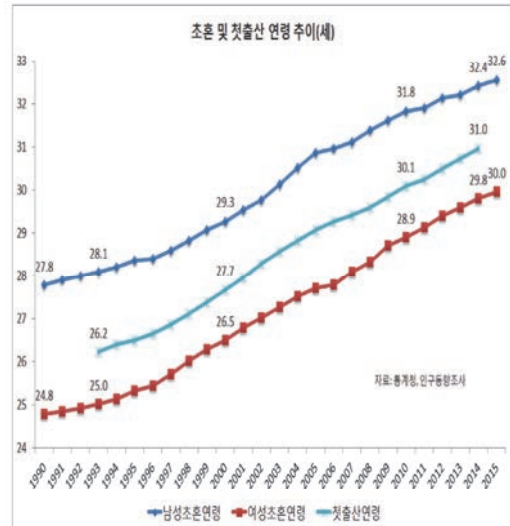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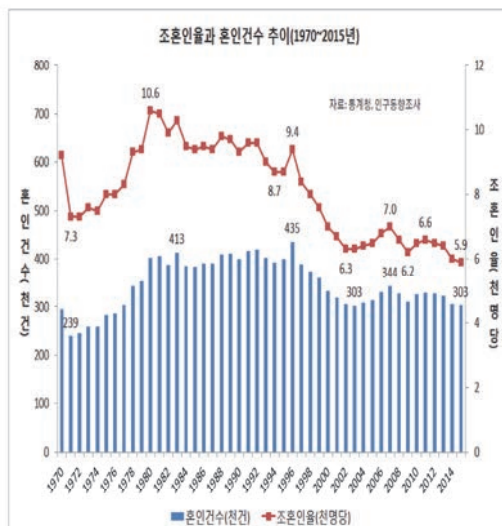
- 한국의 혼외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2.1%)
 - ⇒ 결혼율과 결혼시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 ⇒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율을 높여야

출산률



-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증가한 데 비해,
- 조출생율은 8.9명에서 8.6명으로 감소했음.

혼인률



- 조혼인율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감소하고,
- 남성 초혼 연령 30.9세 → 32.6세, 여성 초혼 연령 27.7세 → 30.0세 증가
- ⇒ 첫째 출산 연령 29.1세 → 31.0세

- 제3차 저출산 대책(2016~2020년)
 - 청년 일자리 · 주거대책 추가
 - 향후 5년간 연령별 혼인율 10% 제고(합계출산률 0.145 제고 효과)

성과지표	현재 (2014)	목표 (2020)	출처	설정근거	관련과제
청년(15~29세) 고용률	40.7%	48%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50.9%)도달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과제 일학습병행 등
육아휴직자 중남성비율	5%	15%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연간 근로시간	2,057 시간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평균 수준도달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15~64세)고용률	55.4%	62%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평균 수준도달	여성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 (평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혼인율 제고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
 - But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수단은 보이지 않음. 기존의 노동정책 재탕.
 - 고용의 질 저하 하는 노동시장개혁 법안(파견법) 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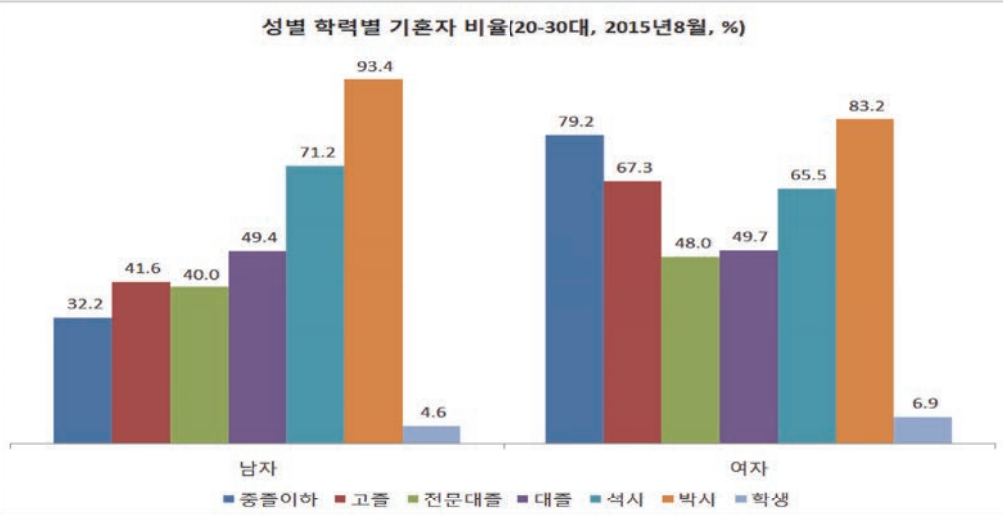


II. 결혼 영향요인 분석

1. 기술통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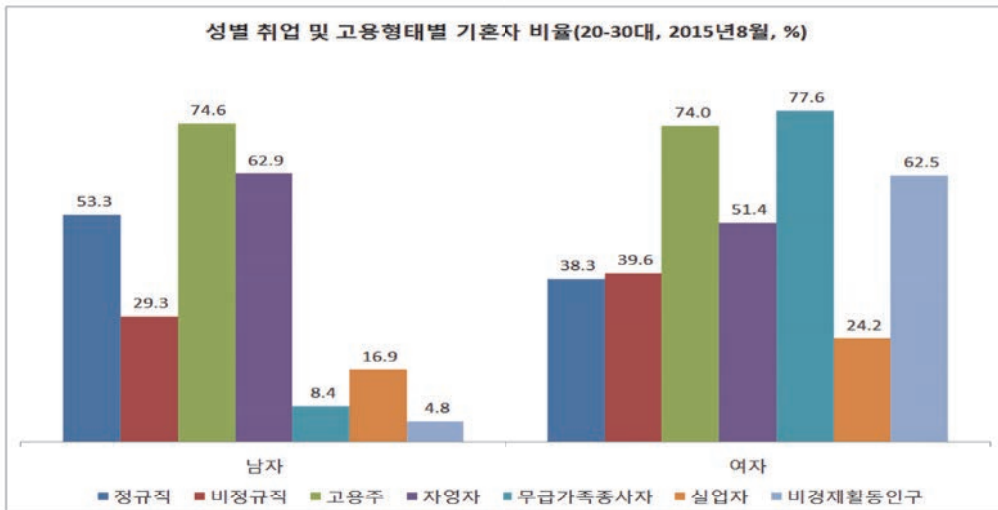
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5년8월, %)



- 학생 기혼자는 남성 4.6%, 여성 6.9%로 예외적으로 낮다.
- 남성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다.
- 여성은 전문대졸과 대졸 학력에서 기혼자 비율이 가장 낮다.

취업 및 고용형태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5년8월, %)



- 남성 : 고용주>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 여성 : 무급가족종사자>고용주>비경제활동인구>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2. 결합로지분석 (pooled logit)

가. 전체

20-39세 2003-2015년	남성				여성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0.976	0.000	***	2.654	1.180	0.000	***	3.255
연령제곱	-0.011	0.000	***	0.989	-0.014	0.000	***	0.986
중졸	-0.323	0.000	***	0.724	1.659	0.000	***	5.256
고졸	0.078	0.000	***	1.081	0.891	0.000	***	2.439
전문대졸	-0.016	0.494		0.984	0.243	0.000	***	1.275
석사	0.343	0.000	***	1.409	-0.036	0.496		0.965
박사	1.114	0.000	***	3.046	-0.022	0.935		0.978
학생(재학휴학생)	-0.357	0.000	***	0.700	-1.074	0.000	***	0.342
비정규직	-0.615	0.000	***	0.540	-0.081	0.001	***	0.922
고용주	0.418	0.000	***	1.519	0.323	0.000	***	1.381
자영업자	-0.042	0.196		0.959	0.046	0.315		1.047
무급가족	-1.870	0.000	***	0.154	1.595	0.000	***	4.928
실업자	-1.394	0.000	***	0.248	-0.771	0.000	***	0.463
비경제활동인구	-1.962	0.000	***	0.141	1.628	0.000	***	5.096
상수	-19.052	0.000	***	0.000	-22.665	0.000	***	0.000
관측치	130,324				146,767			
모형설행력	0.379				0.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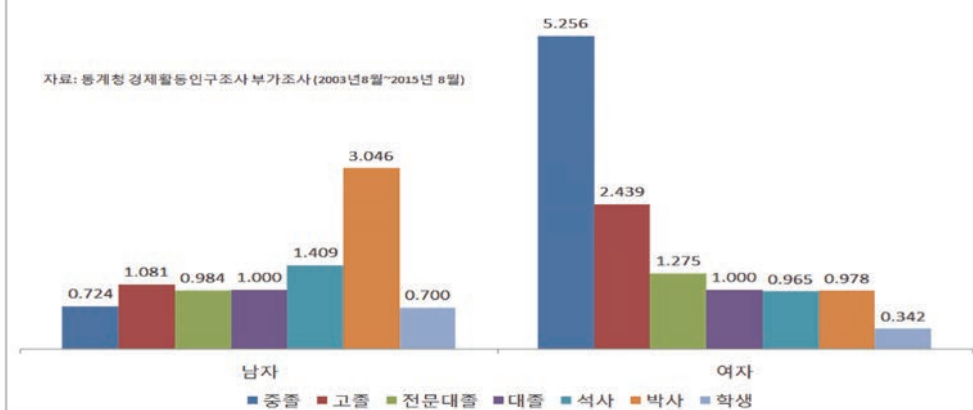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8~2015.8 월자료

주: 대졸(학사), 정규직, 2003년을 기준디미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연도 디미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

학력

성별 학력별 승산비(2003.8-201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년8월~2015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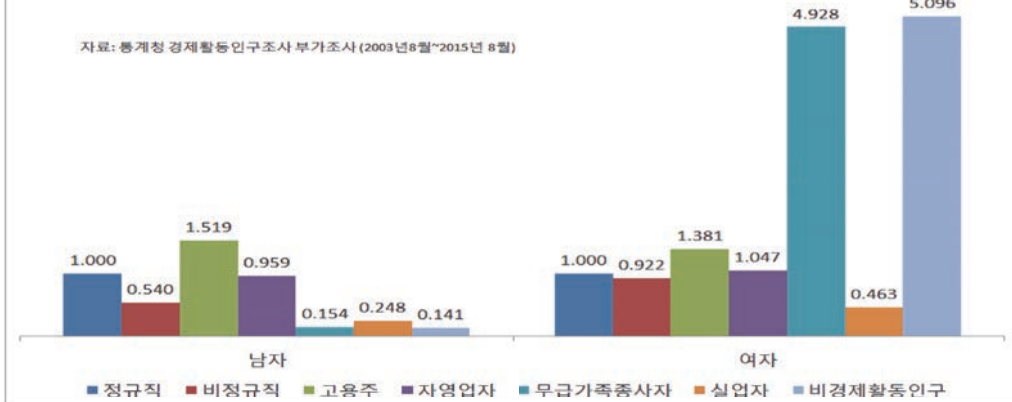


- 남성 : 박사>석사>고졸>대졸>전문대졸>중졸>학생
- 여성 :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석사>박사>학생

취업 및 고용형태

취업 및 고용형태별 승산비(2003.8-2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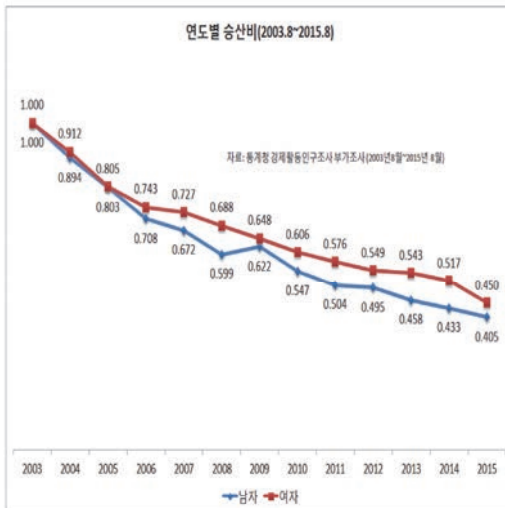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년8월~2015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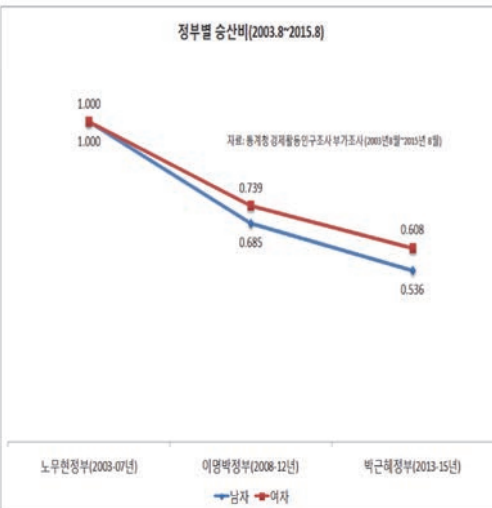
- 남성 :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실업자>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 여성 : 비경제활동인구>무급가족종사자>고용주>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연도 / 정부 더미

연도별 승산비(2003.8~2015.8)



정부별 승산비(2003.8~2015.8)



- 연도 :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기혼자 비율 하락 추세
- 정부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나. 노동자

20-39세 2003-2015년	남성 (모형1)				남성(모형2)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1.001	0.000	***	2.720	0.901	0.000	***	2.463
연령제곱	-0.011	0.000	***	0.989	-0.010	0.000	***	0.990
중졸	-0.353	0.000	***	0.703	0.071	0.307		1.073
고졸	0.030	0.209		1.031	0.267	0.000	***	1.307
전문대졸	-0.044	0.100		0.957	0.109	0.000	***	1.115
석사	0.358	0.000	***	1.431	0.281	0.000	***	1.324
박사	1.228	0.000	***	3.416	0.903	0.000	***	2.466
학생(재학휴학생)	-0.255	0.000	***	0.775	-0.080	0.141		0.923
비정규직	-0.605	0.000	***	0.546	-0.319	0.000	***	0.727
저임금계층					-0.827	0.000	***	0.437
고임금계층					0.872	0.000	***	2.392
상수	-19.565	0.000	***	0.000	-17.325	0.000	***	0.000
관측치	83,480				83,480			
모형설명력	0.285				0.3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8~2015.8 원자료

주: 대졸(학사), 정규직, 중간임금계층, 2003년을 기준년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연도 더미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

20-39세 2003-2015년	여성 (모형1)				여성(모형2)			
	계수값	P>z		odds	계수값	P>z		odds
연령	1.188	0.000	***	3.281	1.224	0.000	***	3.401
연령제곱	-0.014	0.000	***	0.986	-0.015	0.000	***	0.986
중졸	1.853	0.000	***	6.380	1.747	0.000	***	5.737
고졸	0.757	0.000	***	2.132	0.775	0.000	***	2.171
전문대졸	0.046	0.125		1.047	0.103	0.001	***	1.108
석사	-0.059	0.360		0.943	-0.136	0.039	*	0.873
박사	-0.118	0.695		0.889	-0.205	0.532		0.815
학생(재학휴학생)	-0.293	0.000	***	0.746	-0.337	0.000	***	0.714
비정규직	-0.083	0.001	***	0.921	-0.166	0.000	***	0.847
저임금계층					0.617	0.000	***	1.854
고임금계층					0.561	0.000	***	1.753
상수	-23.029	0.000	***	0.000	-23.092	0.000	***	0.000
관측치	68,302				68,302			
모형설명력	0.395				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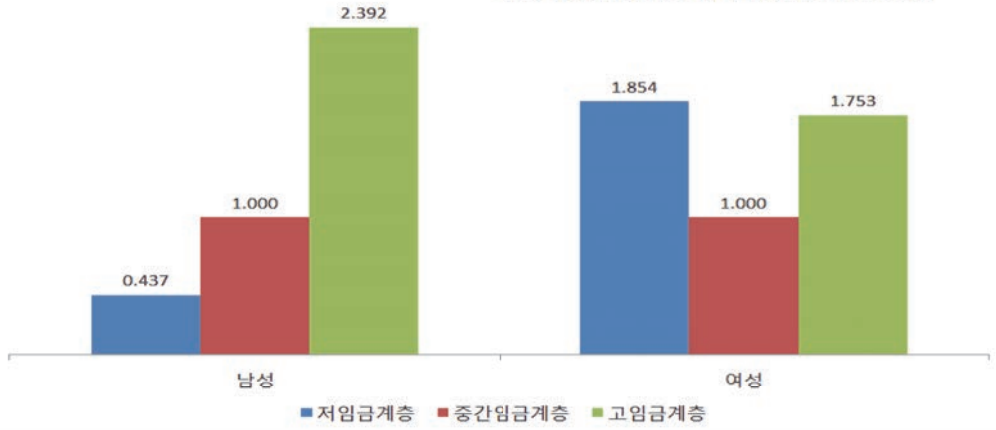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8~2015.8 원자료

주: 대졸(학사), 정규직, 중간임금계층, 2003년을 기준년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연도 더미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

임금수준

임금수준별 승산비(노동자, 2003.8-2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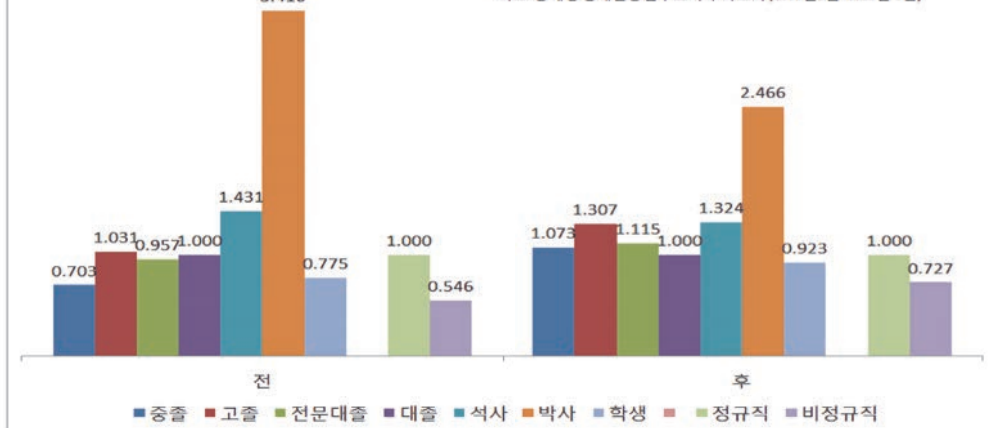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년8월~2015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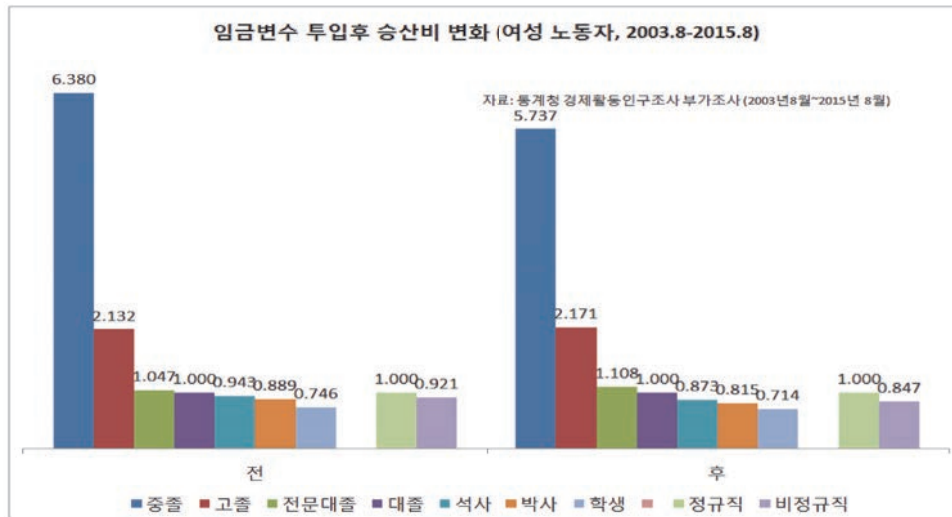


- 남성 : 고임금 > 중간임금 > 저임금
- 여성 : 저임금 > 고임금 > 중간임금
- 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 학력과 고용형태 계수 값 크게 변함.

임금변수 투입후 승산비 변화 (남성 노동자, 2003.8-201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년8월~2015년 8월)





3. 합의

-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임금수준)를 확보하지 못 하면 결혼도 못 함.
 - 남성이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고 결혼시기가 늦춰지면서 여성의 결혼시기와 자녀 출산연령도 늦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
 - But 청년(남성)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III.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검토

정부 대책 (2015.7.27)

구분		세부방안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명)			
			15년	16년	17년	계
신규채용	합계		12,000	30,000	33,000	75,000
	공공부문	소계	2,000	18,000	20,000	40,000
		교원명예퇴직확대				15,000
		포괄간호서비스확대				10,000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				8,000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등				7,000
	민간부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0,000	10,000	30,000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문인력 지원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중견기업 인턴	15,000	30,000	30,000	75,000
직업훈련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10,000	10,000	20,000
일학습병행제		대기업 확대 등	2,000	8,000	20,000	30,000
전체			29,000	78,000	93,000	200,000

정부 대책 (요약)

- 정부 계획 20만명(3년) = 신규채용 7만5천명 + 인턴·직업훈련 12만5천명
- 신규채용 7만5천명 중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임금삭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5만3천명으로 대부분
 - 교원명예퇴직확대 1만5천명
 - 임금피크제 도입 3만8천명 (공공기관 8천명, 민간부문 3만명)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 7천명, 해외취업 5천명
- 신규채용 중 포괄간호서비스 확대(1만명)만 긍정적. 그러나 실제 필요한 인력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계획.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에 필요한 간호인력은 4만8천명(시범사업 인력기준) 내지 10만3천명(선진국 인력기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

-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이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을 의미
 -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
 - 민간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임.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 뽑아놓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중손실 문제만 발생할 것임.
 -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이 일부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목표를 100% 달성해도 연간 4,000명.
-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부터 지키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IV. 청년 일자리 대책

1. 실 노동시간 단축

-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실제 정부 정책)
 - 법정근로시간 한도 주52시간을 주60시간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신설)
 - 통상임금 범위 축소(고정상여금에 재직자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노동시간 실태)
 - 연간 노동시간
 - 2013년 2,201시간(주42.2) → 2014년 2,240시간(주43.0) → 2015년 2,228시간(주42.7)
 - 주40시간 근무제
 - 2013년 66.4% → 2014년 66.4% → 2015년 65.7%
 - 법정 초과근로 한도(주52시간) 초과
 - 2013년 17.8%(325만명) → 2014년 19.0%(357만명) → 2015년 17.9%(345만명)

노동시간 단축목표 : 2020년 1800시간

영역	정책수단
정상 근로시간	주5일(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2015년 65.7%)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실시(주3/4일제 또는 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상용 파트타임 확대(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고용 질 개선)
초과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제한 : 주52시간 지키기 → 주48시간(유럽연합 지침)
	최소휴식시간제 도입(11시간, 유럽연합 지침)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부문도 주60시간 초과금지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격일제, 2조2교대제)
	칼퇴근(정시출퇴근) 문화 조성
휴일휴가	휴일근로 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연차휴가일수 확대(15일 → 20일) 및 사용일수 확대
적용제외 축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조항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축소
근로감독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협치 구조 형성
	근로감독 강화 (법대로, 법과원칙)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의 고용효과

구분	실노동시간 단축 가정	전체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		단축시 간합계 (천시간)	고용창 출 가능인 원 (천명)
		수 (천명)	근로시 간합계 (천시간)	현재	적용 후	주	연		
주5일제 적용중 +5인미만사업체 +시간적용제외	불변	15,657	594,220	38.0	38.0	0.0	0	0	0
5인이상사업체,시 간적용산업중 주5일제 미적용	3시간 단축	3,654	159,379	43.6	40.6	3.0	156	10,963	270
	4시간 단축				39.6	4.0	208	14,618	369
전체	3시간 단축	19,312	753,599	39.0	38.5	0.6	30	10,963	270
	4시간 단축				38.3	0.8	39	14,618	3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 원자료

- 현행법 대로 적용 시(5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 제외) 27~37만개
-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시 51~7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시나리오	전체 (천명)	초과근로자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연간시간 단축효과	고용창출가능인원(천명)			
			수 (천명)	비율 (%)			60시간 근무	52시간 근무	48시간 근무	40시간 근무
주52시간 상한제	전체	19,230	3,452	18.0	30,657	83		590	639	766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 제외	11,737	2,035	17.3	17,096	46		329	356	427
주60시간 상한제	전체	19,230	1,129	5.9	10,095	27	168	194	210	252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 제외	11,737	615	5.2	5,306	14	88	102	111	133
주48시간 상한제	전체	19,230	5,236	27.2	48,591	131			1,012	1,215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 제외	11,737	3,193	27.2	27,923	76			582	6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원자료

- 생산성 3% 증가, 생산물 7% 감소 시 고용효과 10% 축소.

2.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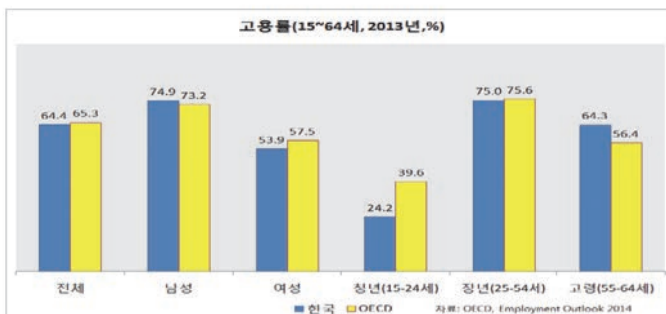
-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 민간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유도
- (실제 정부 정책)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은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
 -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근로 전면 허용 추진
- (개선방향)
 -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용역)도 상시·지속적 업무면 정규직 전환
 - 예) 서울, 인천, 광주, 성남시
 - 민간부문 재벌기업도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
 - 예)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37.7%) 중 사내하청 40만 명(30.7%)
 -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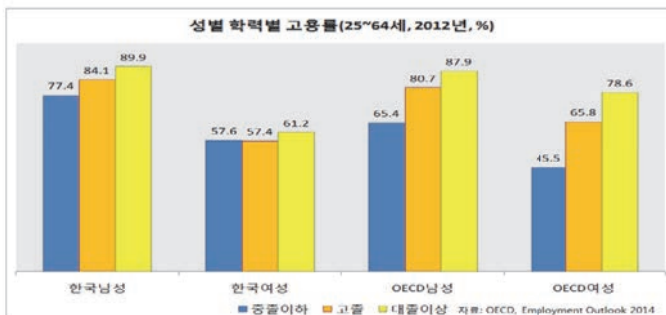
대기업집단	조사기업 수(개)	수(천 명)					비율(%)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삼성	36	372	239	133	16	117	35.8	4.3	31.5
현대자동차	28	224	150	74	14	60	33.0	6.3	26.8
SK	34	106	72	34	4	30	32.1	4.1	28.0
LG	31	165	138	27	5	22	16.6	2.9	13.6
롯데	30	126	66	60	25	34	47.4	20.3	27.1
포스코	15	65	31	34	4	30	52.6	6.2	46.4
GS	15	45	20	25	9	16	56.5	20.0	36.5
한화	20	59	35	23	6	17	39.7	10.7	29.0
현대중공업	8	105	37	68	3	65	65.2	3.2	62.0
농협	16	43	25	18	10	8	42.4	23.8	18.6
10대 재벌	233	1,309	811	498	97	400	38.0	7.4	30.6
11-20대 재벌	92	420	221	199	55	144	47.4	13.2	34.2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464	4,737	2,836	1,900	969	931	40.1	20.5	19.7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6.3)에서 계산, 김유선박관성(2016)에서 재인용.

[보론1] 고용률 70% ?



- 남성 고용률은 높고, 여성 고용률은 낮음.
 - 청년 고용률은 낮고, 고령자 고용률은 높음.
- ☞ 은퇴 후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 고용률과 빈곤율 모두 높음.



-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낮고
 - OECD 여성보다 중졸 이하 12.1%p 낮고, 고졸은 8.4%p, 대졸이상은 17.4%p 낮음.
- ☞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 → 고학력 여성 취업 포기
- ※ 청년과 고학력 여성 고용률 높으려면 고용의 질 개선해야

3.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 (정부·새누리당 실업급여 개정안)

-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 → 60% (O)
- 지급기간 : 90~240일 → 120~270일 (O)
- 기여요건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X)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 80% (X)

- (개선방향)

- 지급기간 : 90~240일 → 180~360일
- 기여요건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 (자발적 이직자) 성실하게 취업노력을 기울였음에도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청년수당) 지급
- (고령자) 연금 확대 :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률/빈곤율 모두 높음.

4.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고용하여야 한다'로 개정.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 적용.

- (성과)

-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 2013년 212개(51.3%) → 2014년 291개(74.4%)
- 신규채용 청년 : 2013년 10,691명(3.5%) → 2014년 14,549명(4.8%)

- (한계)

- 100개 공공기관(25.6%)이 청년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음.

- (원인)

- 기재부가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등 개정법 이행을 뒷받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해당 기관은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킴.
 - 명단공개, 기관평가 불이익(100점 만점에 0.5~1.3점 반영)

- (2016년 4월 총선 야3당 공약)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공공기관 5%, 민간대기업 3~5%, 5년 한시 도입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청년의무고용비율 : 3% → 5%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에 확대 적용
 - 의무 이행 사업주 고용지원금 지원, 불이행 사업주 고용부담금 부과

청년의무고용비율 5% 적용 시 민간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 추정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
현재 인원	노동자수	459만명	130만명
	정규직	278만명(60.5%)	81만명(69.3%)
	비정규직	182만명(39.5%)	49만명(30.7%)
청년 의무	노동자수	23만명	6.5만명
고용 5%	정규직	14만명	4만명

자료: 노동부(2015),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서 추정.

5. 청년인턴제 폐지

- 노동부 2015년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수시감독 결과
 -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 필요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 불이행하는 사례.
- 청년인턴도 일종의 고용할당제.
 -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하지 않고,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 초래.
 - 청년인턴제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청년수당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강병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6.9.12
 - 2015년 사업비 2,561억원 중 1/3인 821억원을 420개 민간위탁업체에 맡김.
 - 상위 4개 민간위탁업체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¼이 넘는 226억원 독점.
 - 인지어스 107억원, 커리어넷 62억원, 제이엠커리어 33억원, 제니엘 24억원
 - ⇒ 민간위탁업체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
 - 2015년 월급 150만원 이상 취업 55%, 1년 이상 고용유지 47%에 불과

6.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일소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2020년 1만원

- 목표 : 평균임금의 50% (단계적 현실화) ≍ 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α (소득분배 개선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표성 제고)

(엄정한 법 집행 통한 탈법적 사각지대 해소)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 협치 구조 형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 노동자 → 사용자
-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 가사사용인, 수습사용 중인 자 100% 적용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감액 적용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발제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
금현섭
서울대학교 교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진단

가사 및 양육 부담을 중심으로

금현섭(서울대학교)

저출산 문제의 맥락

- 인구감소 → 저성장
 - 생산인구와 소비인구 감소, 재정 부담 가속
 - 기대소득과 기대소비 간의 격차 증가
- 인구구조 변화 → 고령화의 가속
 - 사회의 활력/동태성(dynamics) 저하 → de-motivated society
 - 학습에 따른 기대 저하
- Intra-transition 요구 → 청장년층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제도적 규범의 변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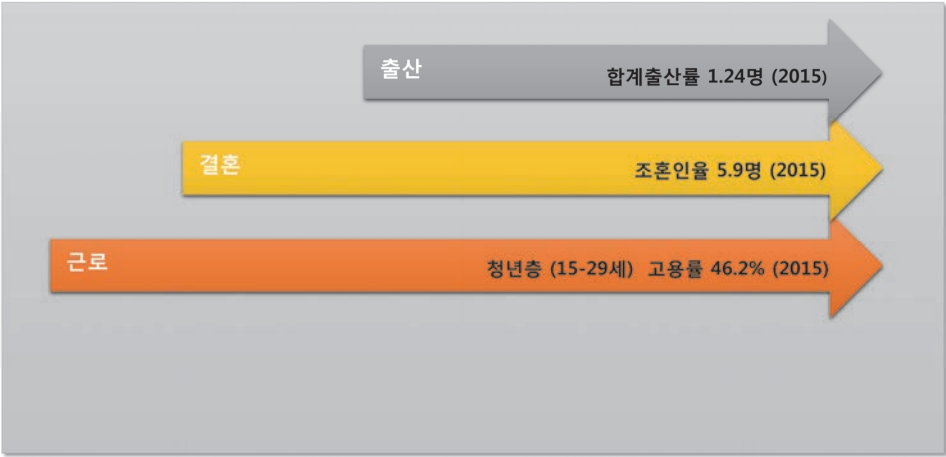
저출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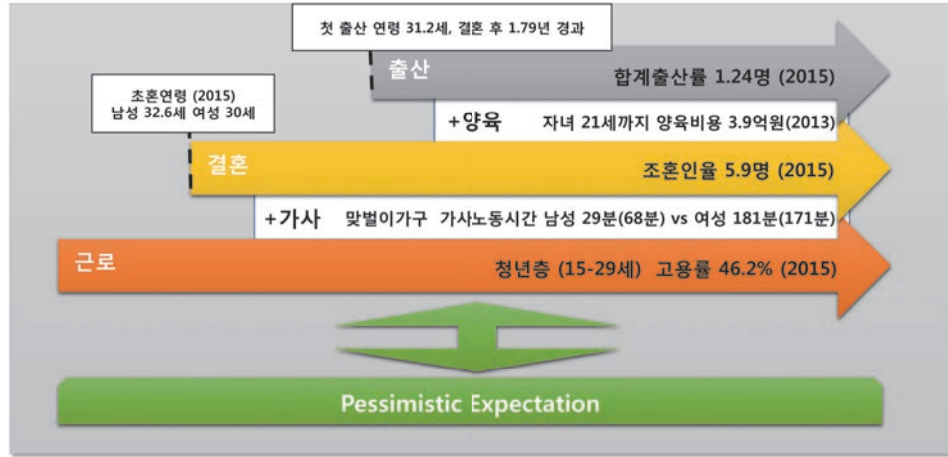
개인-부부 차원에서의 선택

개인차원	환경차원
비용 편익 선호 가치	배우자 동료-집단 제도 규범

저출산 관련 요인의 구조화



저출산 관련 부담요인의 구조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의 부정적 응답 38.5% (2014 국민인식조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Mapping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제도 수혜 대상 / 지원 규모의 확대, 문화적 개선		
대상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맞벌이가구, 제도도입·비용위주	청년, 신혼부부 등 종합적 대책
분야별	결혼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소득기준 완화) 청년고용 활성화
	출산	임신·출산 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지원비 상승(30→50만원) 난임부부 임신·출산비용 확대	행복출산패키지(비용 대폭 경감) 난임부부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근로	각종 휴가급여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제	후가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노동개혁 / 고용창출 청년고용 안정 강화
	가사	가족친화인증기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남녀가사분담 근로시간 단축,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일가양육캠페인
	양육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미혼모/부 지원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교육개혁

1. 근로

청년층 근로 현황

- ❖ 청년층 (15-29세) 고용률 46.2% (2015)
- ❖ 15세 이상 전체는 60.3%로 15.2%p 차이.
- ❖ 청년층 (대졸자)의 졸업평균소요시간: 51개월
- ❖ 첫취업 평균소요시간: 11개월
- ❖ 평균근속기간 (2007-2016): 19개월
- ❖ 청년층의 비정규직 규모는 19-29세는 33.2%...
- ❖ 30-49세는 18.6%, 50세 이상은 27.6%

청년층의 근로에 있어서의 문제

❖ 학력별 졸업자 취업 현황

연도	2000		2005		2010		2015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전문계고(특성화고)>								
졸업자	291,047	100.0	170,255	100.0	156,069	100.0	100,941	100.0
취업자	149,543	51.4	47,227	27.7	29,916	19.2	46,760	46.3
<전문대학>								
졸업자	223,489	100.0	228,763	100.0	190,033	100.0	182,424	100.0
취업자	159,960	71.6	177,915	77.8	97,717	51.4	97,468	53.4
<대학교>								
졸업자	214,498	100.0	268,833	100.0	279,603	100.0	322,413	100.0
취업자	104,371	48.7	154,542	57.5	129,009	46.1	147,059	45.6
<대학원>								
졸업자	53,379	100.0	77,041	100.0	87,870	100.0	94,741	100.0
취업자	39,108	73.3	60,280	78.2	63,130	71.8	56,157	59.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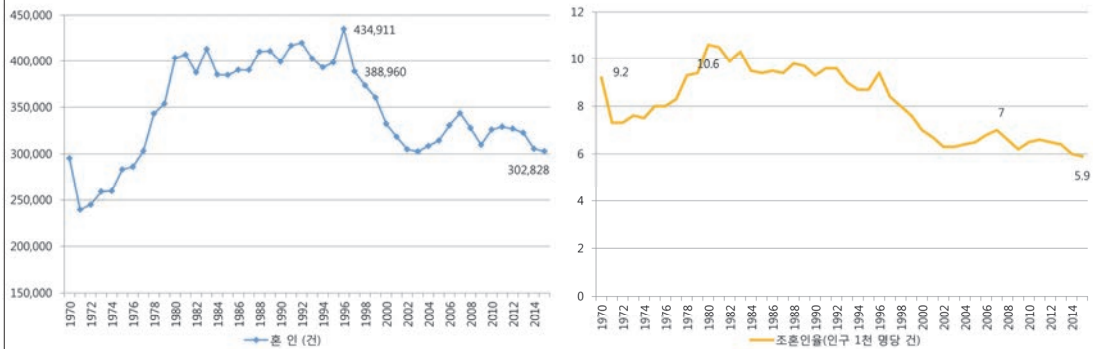
주: 본 자료에서 취업자는 순수 취업자(전학자, 입대자 제외)를 의미함.

2. 결혼

- 비혼과 만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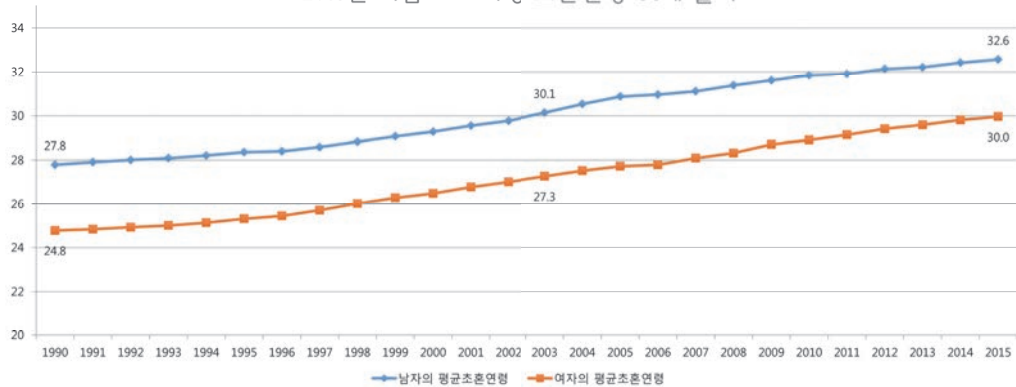
비혼?

- ★ 혼인건수는 1996년 이후로 30만건 수준
- ★ 조혼인율은 2015년 5.9로 역대 최저 수준



만혼?

2015년 처음으로 여성 초혼연령 30세 돌파



-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
- 2014년 13세 이상 여성은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3%로 남자 61.5%보다 낮고, 2008년 61.6%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미혼남성 51.8%가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 미혼여성은 38.7%만이 찬성
- 이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이 43.6%로 과거에 비해 증가

결혼과 불확실성?

<혼인이행의 결정요인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

			Pooled Probit
독립변수	만족	생활만족도	0.4706*** (0.000)
	불확실성	주관적 계층의식	0.1204*** (0.000)
		계층이동 가능성	-0.0090 (0.797)

학력, 정규직여부, 소득, 성별, 연령 통제

KLIPS(2012)

결혼과 근로?

<혼인이행의 결정요인 -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독립변수	만족	생활만족도	Pooled Probit 0.4894*** (0.000)
		직장만족도	-0.0271 (0.707)
		업무만족도	-0.0041 (0.954)
	불확실성	주관적 계층의식	0.1321*** (0.001)
		계층이동 가능성	-0.0621 (0.141)

KLIPS(2012)

학력, 정규직여부, 소득, 성별, 연령 통제

3.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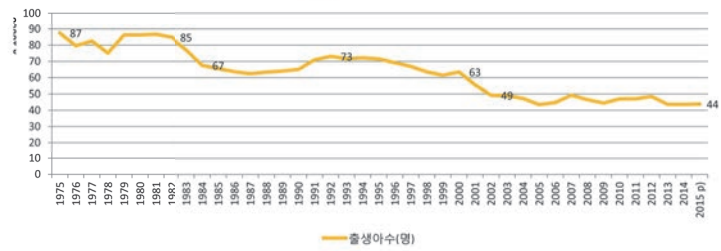
- 적은 출산과 늦은 출산

합계출산률과 출생아 수

- ★ 합계출산율 2005년
의 출산율 쇼크 이후 1.2
수준
- ★ 2015년 1.24, 2016년
1.21미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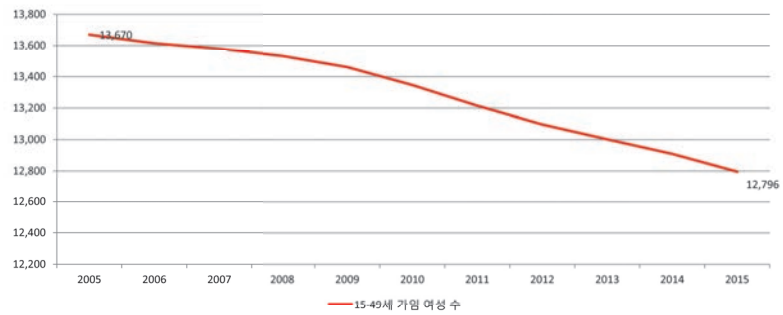


- ★ 2002년부터
50만명 미만의
출생아수
- ★ 가임여성 수 감소,
(Tempo 효과)



가임여성 수의 감소

15-49세 가임 여성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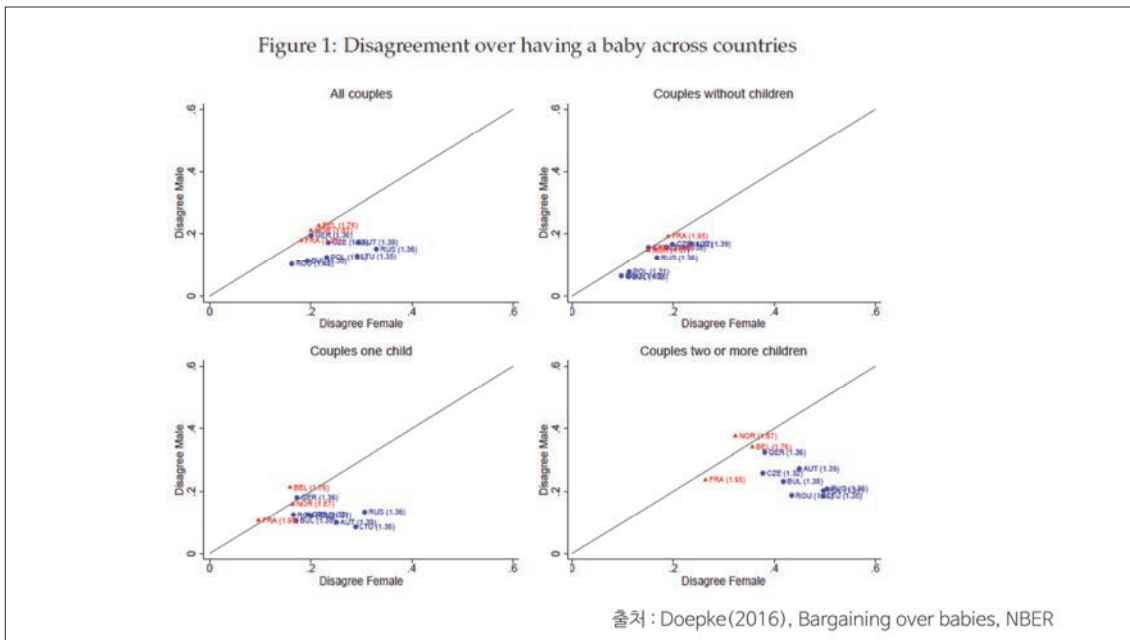
평균출산
연령은?

평균출산연령	obs	mean	Std.dev	Min (화천군)	Max (수지구)
2015	281	32.00331	.5632559	30.43	33.49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첫째아이출산연령	obs	전국평균	Std.dev	Min (충청남도)	Max (서울)
2015	17	31.2	.120089	30.1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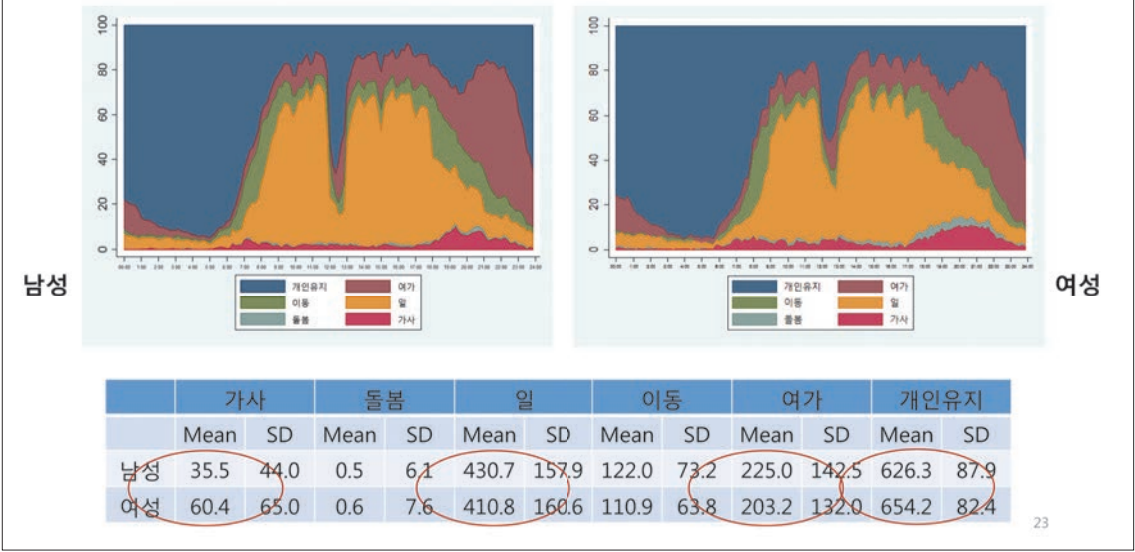
평균출산연령과 첫째아이 출산연령 간의 차이가 적다는 점은 결국
둘째아이 출산 빈도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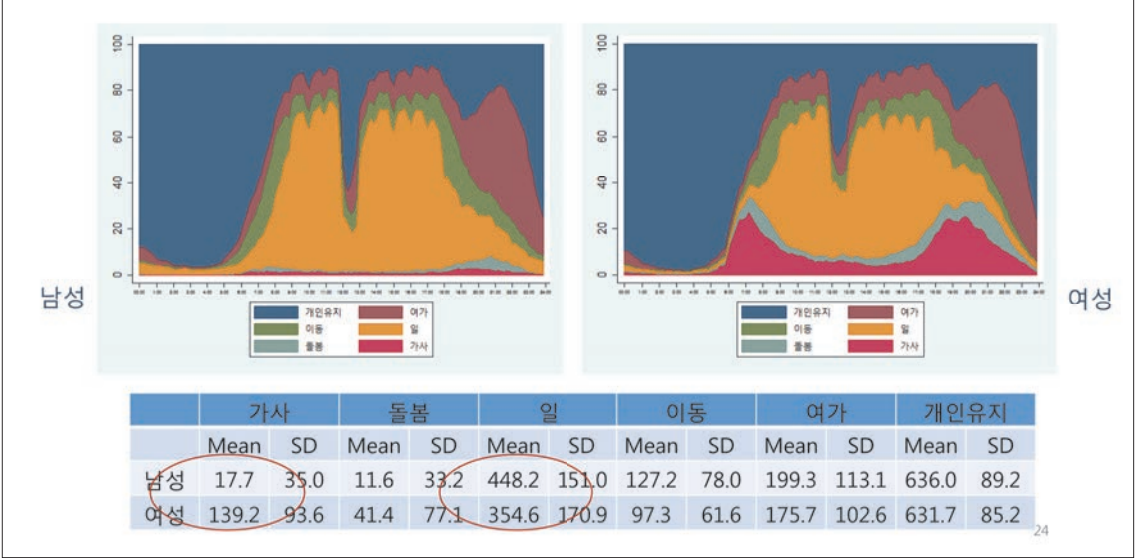
4. 가사

유자녀 유배우여성 중 48%는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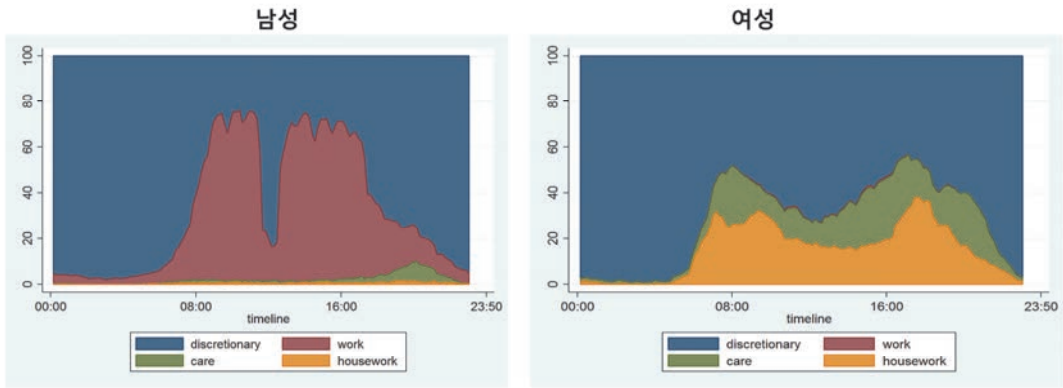
가사 문제 : 1-1) 1인가구 남녀 시간사용패턴 (20-49세)



가사 문제 : 1-2) 맞벌이 가구 남녀 시간사용패턴 (20-60세 유배우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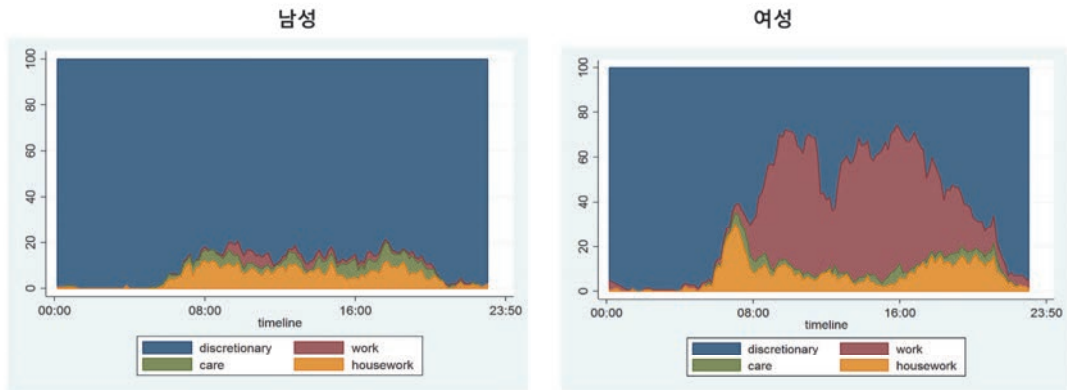


가사 문제 : 1-3) 남성 외벌이 가구의 시간사용 패턴



25

가사 문제 : 1-4) 여성 외벌이 가구의 시간사용 패턴



26

결혼 후 가사의 문제 : 2) 근로지위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가사, 보육,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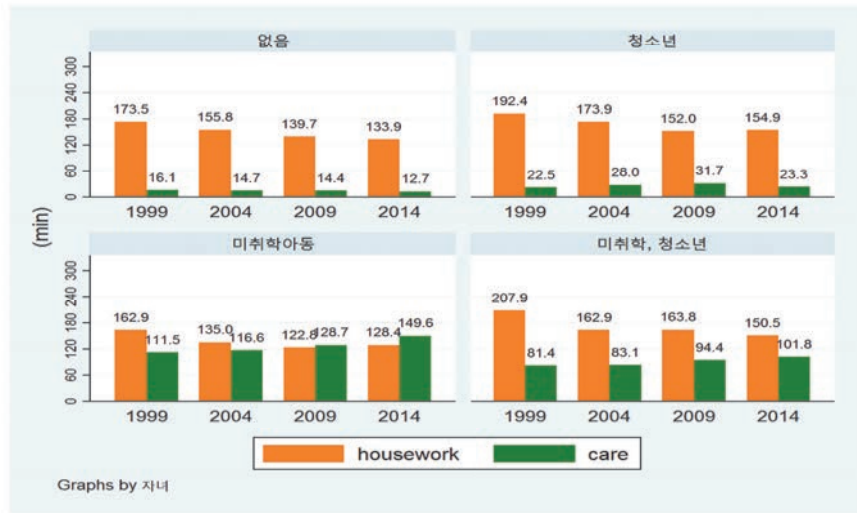


임금근로의 경우 남성은 7시간 43분, 여성은 6시간 37분
반면, 가사와 보육을 포함한 무급노동의 경우 남성이 29분, 여성이 2시간 37분

결혼 후 가사의 문제 : 3) 연령별 맞벌이 여성의 가사, 보육시간



결혼 후 가사의 문제 : 4) 자녀유형별 맞벌이 여성의 가사, 보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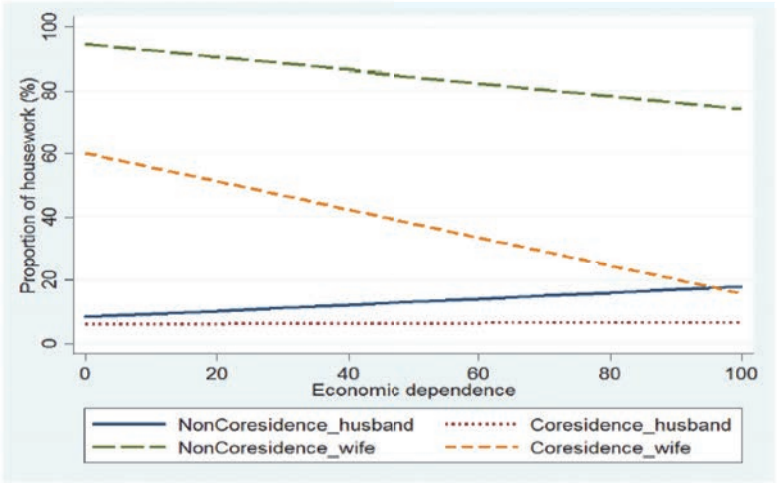
29

결혼 후 가사의 문제 : 5) 맞벌이 부부의 소득수준별 가사, 보육시간

아내 소득 비(%)	2014	아내 소득 비	여성				남성			
			가사		보육		가사		보육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0%	184.9	103.0	44.4	82.6	17.1	35.8	8.3	26.7
0%	14.54	10%	180.5	84.3	41.4	74.8	14.8	27.8	4.6	21.2
10%	8.75	20%	162.0	98.6	43.5	66.8	13.1	25.1	10.8	31.1
20%	15.68	30%	131.0	87.4	37.3	76.2	16.8	34.3	9.9	35.2
30%	24.9	40%	109.8	74.4	46.3	82.8	20.2	35.5	19.4	40.7
40%	14.62	50%	101.8	78.4	41.5	81.9	19.6	40.7	14.3	35.3
50%	17.4	60%	98.1	77.5	27.9	62.5	29.5	42.8	17.2	36.5
60%	2.58	70%	133.4	79.9	23.4	56.3	44.1	50.7	3.8	16.1
70%	0.83	80%	140.9	144.1	38.3	47.0	14.3	29.1	5.7	12.2
80%	0.7									
90%	0									
Total	100									

30

조부모 동거여부



국가별 가사지원정책

	직접고용: 근로자-고객					혼합(mixed): 직접 고용 70 %	3자관계: 근로자-사용자-고객			
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범위	가사, 돌봄	가사, 돌봄	가사	가사, 돌봄	가사, 돌봄	가사, 돌봄	가사	가사, 돌봄	가사	가사
시행	2005 2006	1997	2006	2003 2013	2009	2006통합	2001 2004	1994 1996	1997	2007
방식	바우처	세금감면 바우처	세금감면 바우처 -지역수준	세금감면 바우처	세금감면	세금감면 바우처	세금감면 바우처	세금감면	세금감면	세금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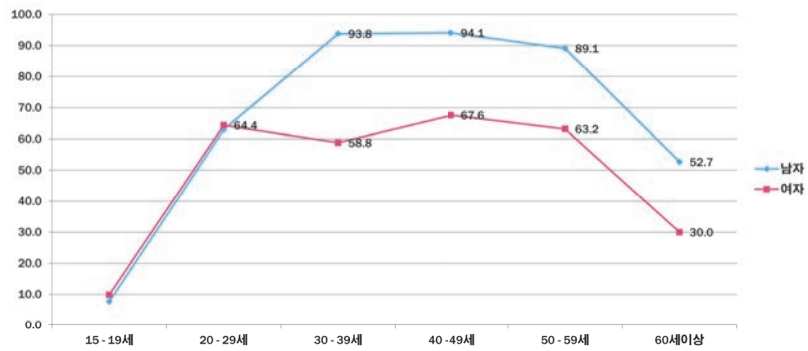
자료: Farvaque 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Raz-Yurovich 2016

5. 양육

유자녀 유배우여성 중 60%가 남편과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인식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과 양육대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동계형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과 양육대체

❖ 취업여성의 보육대체 형태

- 취업여성의 보육대체 형태 구분
 - 개별보육(조부모, 베이비시터) / 시설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보육대체 형태
 - 낮시간에는 주로 시설보육에 의존(85.8%)
 - 늦은 시각(5시 이후)에 개별보육 의존도가 높아짐(28.8%)
 - 시설보육과 개별보육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가 빈번함
(2015 보육실태조사 '시간대별 돌보는 사람 조사')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이 50.5%(2012 보육실태조사),
그 중 만2세 미만 영아는 80.5%(이정림 외 2010)
→ 개별보육 선호 문화, 조부모 보육에 대한 신뢰, 시간적 유연성에 기인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과 양육대체

❖ 보육형태 별 평균 돌봄시간

- 여성가족패널 3-5차년도 자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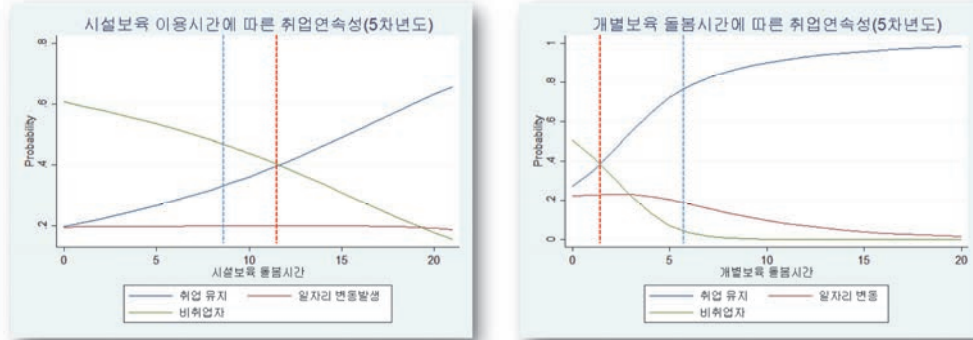
(단위 : 시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원	시설보육 이용시간	개별보육 이용시간	인원	시설보육 이용시간	개별보육 이용시간	인원	시설보육 이용시간	개별보육 이용시간
시설보육만 이용 (1 유형)	171	8.48	-	176	9.59	-	179	7.79	-
개별보육 + 시설보육 (2 유형)	25	8.32	5.23	31	10.00	5.91	30	8.22	5.48
개별보육만 이용 (3 유형)	17	-	6.54	6	-	5.37	4	-	3.88
전체	213	8.46	5.76	213	9.65	5.82	213	7.86	5.29

-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기혼·유배우 여성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보육대체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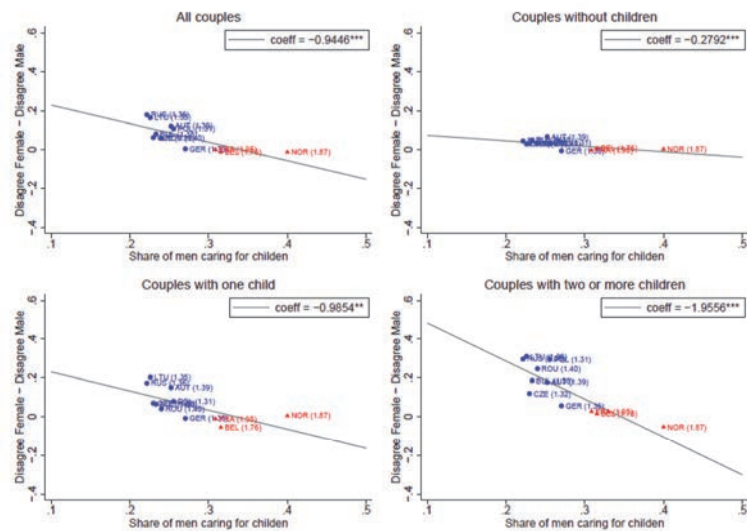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과 양육대체

- 5차년도 데이터에 대한 다항 로짓모형 결과



- 시설보육 돌봄시간이 증가할 수록 취업을 유지할 확률이 증가함. 확률의 순서 바뀜은 12시간 정도에서 나타남.
- 개별보육 돌봄시간이 증가할 수록 취업을 유지할 확률이 증가함. 확률의 순서 바뀜은 2시간 정도에서 나타남.

Figure 2: Disagreement over fertility and men's share in caring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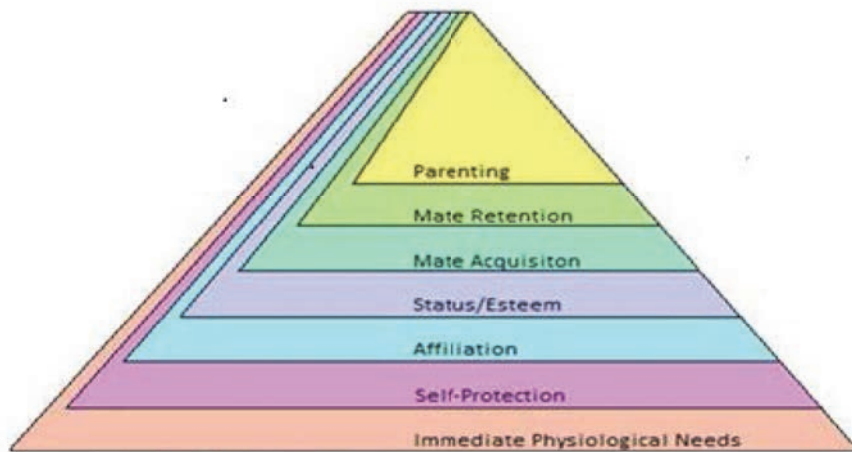


출처: Doepke(2016), Bargaining over babies, NBER

기혼여성의 취업연속성과 양육대체

❖ 정책적 제언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설보육에 더해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 필요**
 - ✓ 한계: 조부모 도움, 개별보육(비용)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보육가치 중요성이 희석될 가능성
- **궁극적으로는 개별보육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1) **시설보육 이용시간의 조정**
 - ✓ 한계: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비선호
 - 2) **부모의 근로시간 조정**
 - ✓ 한계: 장시간 근로 관행 (야근, 이른 출근 등이 큰 애로사항)
 - 3) **남편의 분담이 필수적**
 - ✓ 한계: 성역할과 같은 문화적 장애, 세대간 이견



The revised version of Maslow's pyramid of needs.
Doug Kenrick, Arizona State University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발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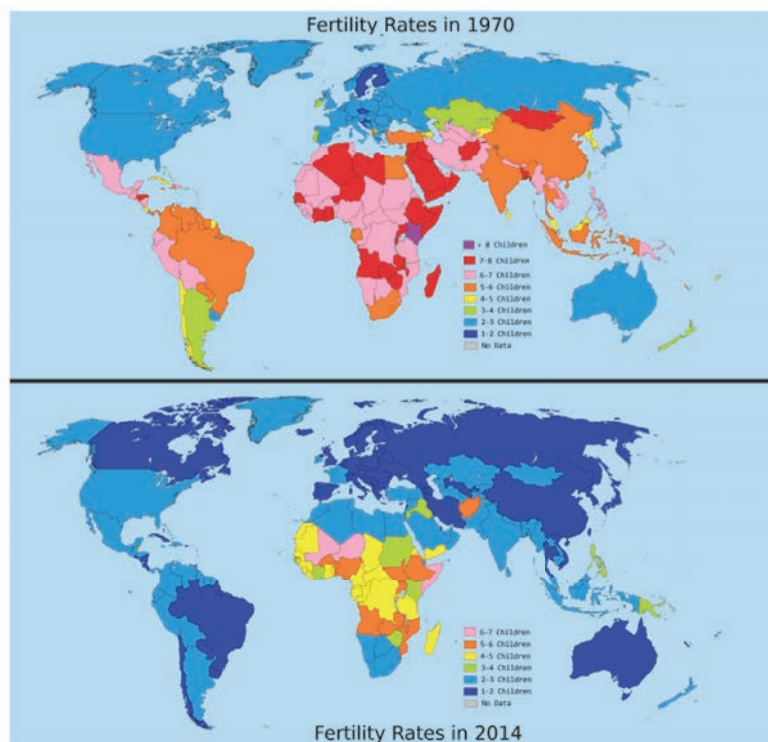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책 :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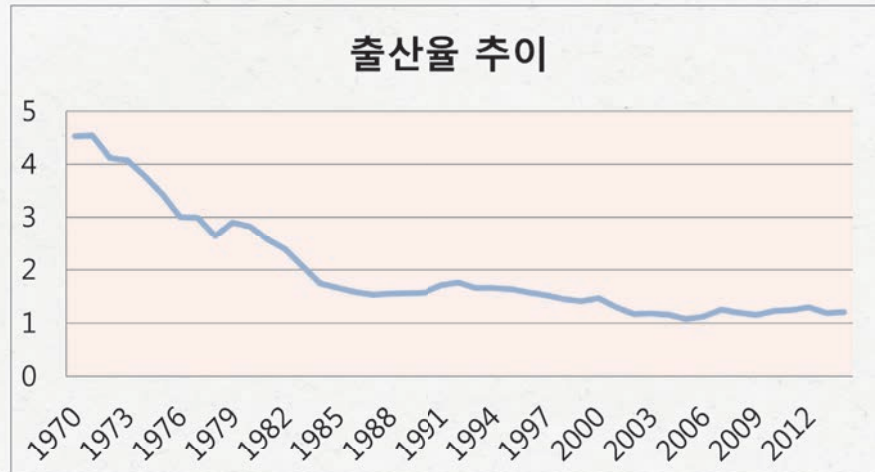
세계 출산율 지도
CIA 2014 FACTBOOK

◀ 1970년

◀ 2014년

출처: <http://brilliantmaps.com/fertility-rates/>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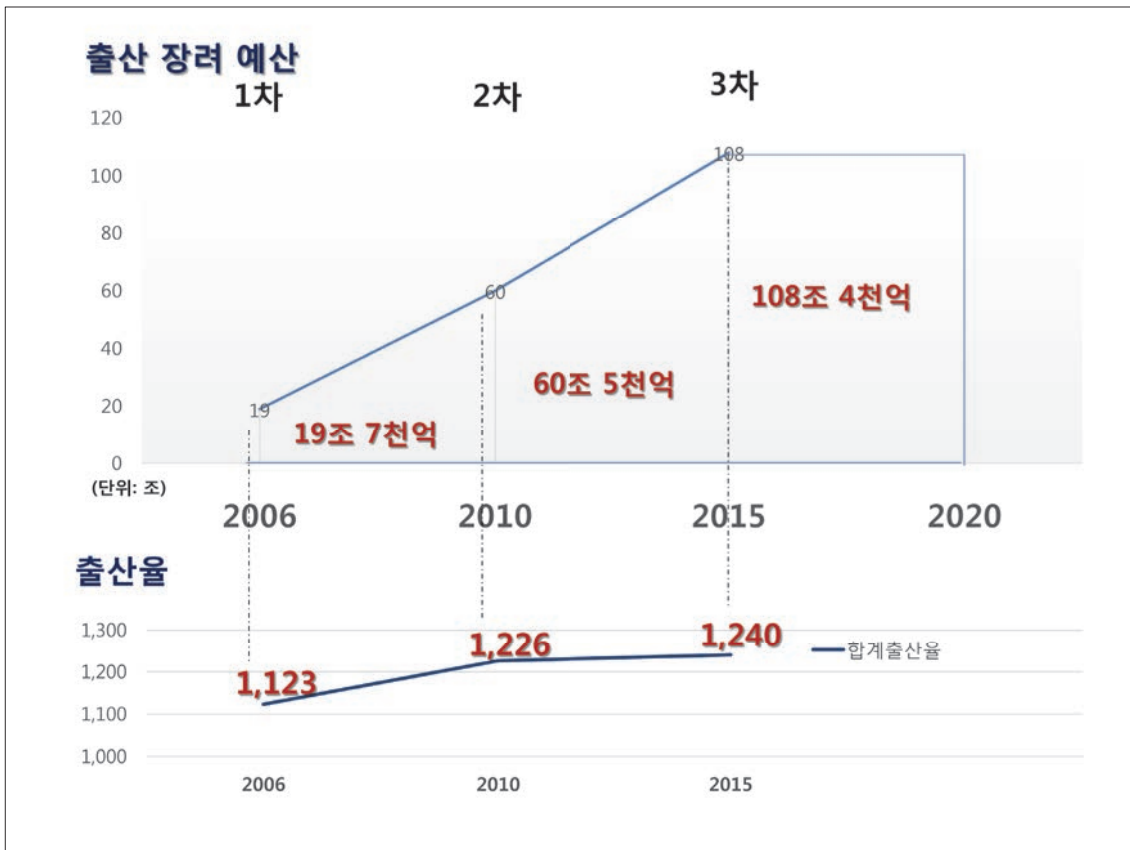


1970년도에 4.5명에 육박했던 출산율이 199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합계 출산율이 1.5명에도 미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가 됨

출처 : 통계청 「2014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 10103호 출생통계」

정책 성과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 0-5세 전면 무상교육제도 확립 및 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 육아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 현황(2006, 2015)

연도	보육시설(단위: 개)		보육아동(단위: 명)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2006	29,233	1,643	1,040,361	114,657
2015	42,517	2,629	1,452,813	165,743

<2006년에 대비 2015년>

- 전체 보육시설 수는 **68.8%**증가, 보육아동 수는 **71.6%** 증가
-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62.5%** 증가,
-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 증가는 **5.6%→6.2%**로 미미함

한계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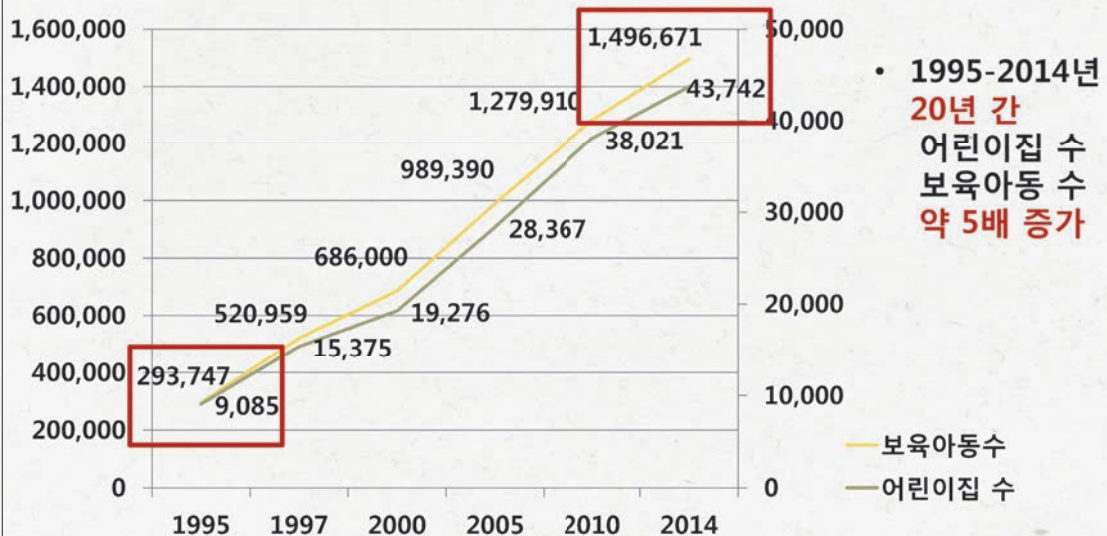
1. 보육시설 중심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
2.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으로 수요자의 선택권 제한
3. 주관적 인식변화보다 객관적 환경변화에 치중한 정책
4. 자녀양육 보람, 소중함보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5. 수혜자 입장에서의 정책평가 부족으로 접근성과 활용정도에 한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 정책의 한계 1



보육시설 중심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

전국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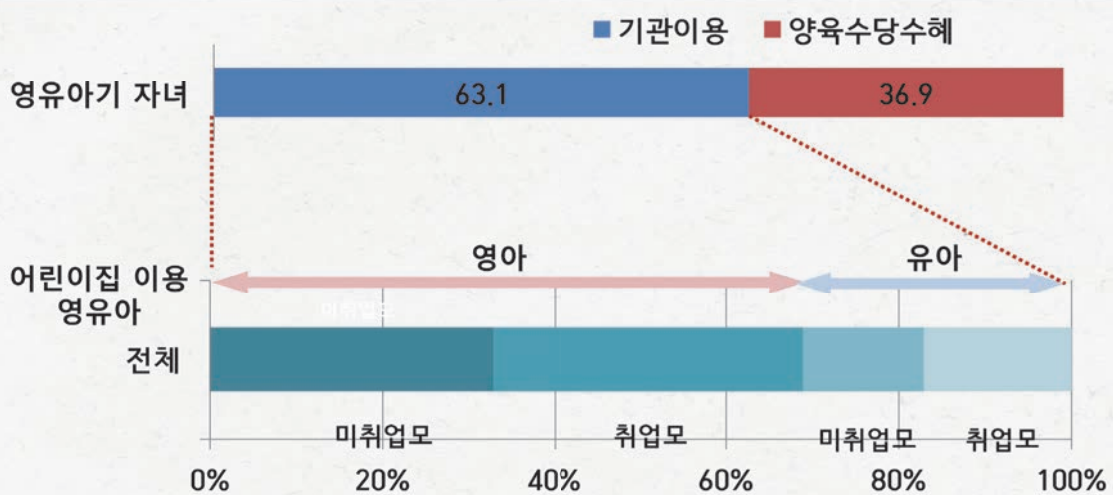
국가 지원 보육예산 배분 (2009/2012/2013/2015)

단위: %

	구분	2009	2012	2013	2015	2015 비율
기관 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20.1	14.0	10.7	10.1	76.9
	보육료 지원	75.2	79.0	62.5	61.7	
	어린이집 기능 보강	1.2	0.4	0.1	0.1	
	보육 인프라 구축	1.7	0.5	0.9	0.3	
	어린이집 평가인증	0.2	0.2	0.1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0.8	2.6	3.7	4.5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0.4	3.4	21.2	22.3	22.3
	기타	-	-	0.4	0.8	
	전체	1,704,840(100)	3,028,567(100)	4,146,625(100)	4,943,994(100)	100

자료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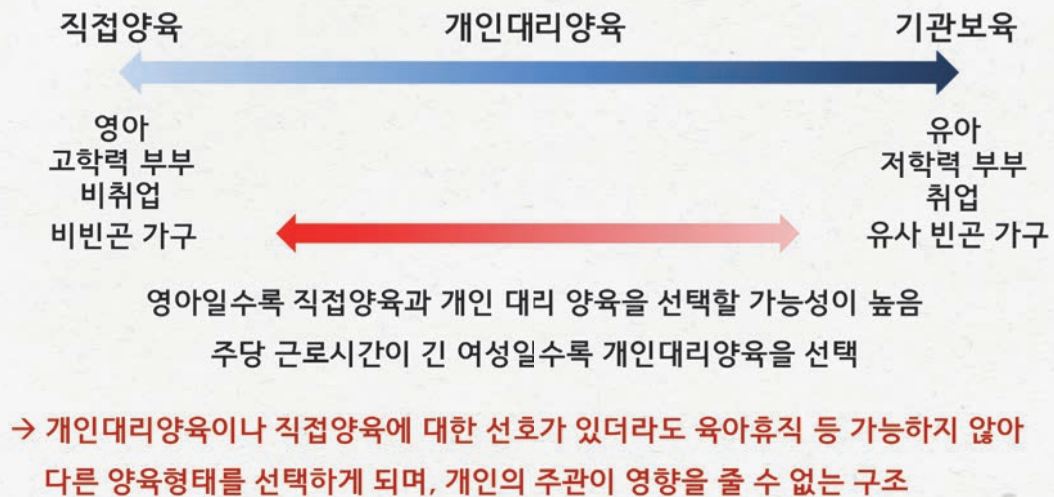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 선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양육수당 수혜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취업모와 미취업모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임

부모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형태 선택 요인



출처: 김영미, 류연규(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환경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15-23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 정책 대안 1



보육시설 중심의 육아지원 유형을
영유아나 부모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 정책의 한계 2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 제한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비용 배분 (2015년도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2010-2015)

해당연령아동 대비 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0	5.45	6.17				
2012	8.12	9.34	3.93	0.26	0.12	0.08
2013	91.49	71.29	30.59	13.38	8.58	8.64
2014	91.32	70.63	29.73	12.66	8.28	7.78
2015	91.00	70.83	30.05	13.62	8.44	8.01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유치원 포함0-5세 시설 이용률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단가 비교

: 2016년(월 지급액수)

연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B-A
	월령	단가(A)	반편성	단가(B)	
0세	12개월 미만	200,000	0세반	825,000	625,000
1세	24개월 미만	150,000			675,000
2세	36개월 미만	100,000	1세반	569,000	469,000

[단위 : 원]

주: 보육료는 중일반 기준이며,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와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보육료를 합산한 액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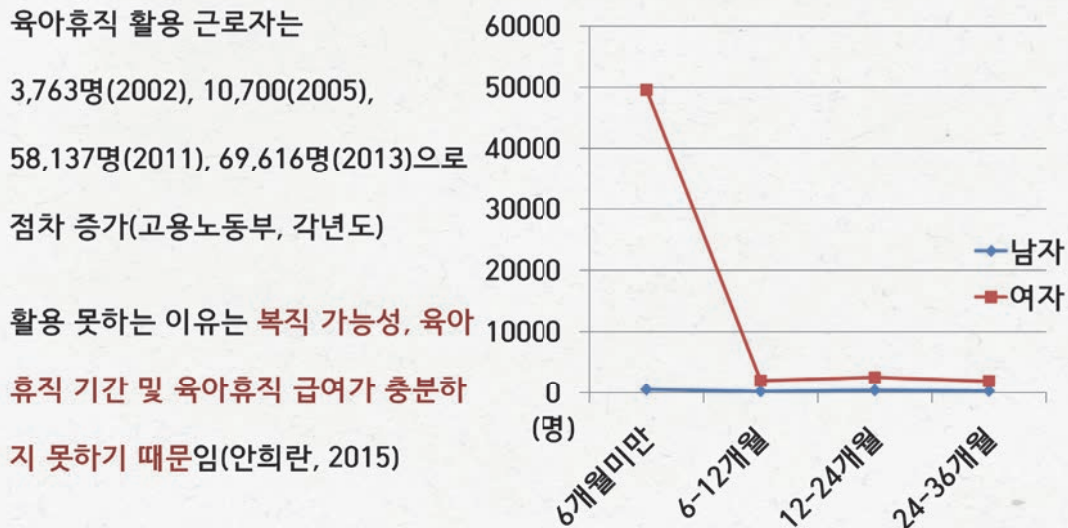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저소득 계층과 취업모에 국한된 서비스로 부모들의 이용에 한계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지원체계
시간제	시간제(일반형)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480시간 지원 (1일 2시간 이상)	지원대상: 저소득계층 - > 저소득 및 취업모 (2012) 정부보조금은 가정소득 에 따른 차등지원 (0-75%)
	종합형 돌봄서비스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지원 (1일 4시간 이상)	보육시설지원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기관	보편지원 (50%)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신청율 (2011년)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활용에는 한계:



남성 육아휴직자의 제도 활용: 사회적 조건상의 어려움

저희 회사도 사실 남자 육아휴직을 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다가 한 놈이 이제 사고를 치고 낸 거예요... 내심 하고 싶었는데 우리도 그런 걸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되고 그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근데 세무사가 올려줬어요. 사실, 저도 끝까지 고민했죠. 왜냐면 다 먹구살만한 애들이었거든요.
- (사례B)

‘세무사’는 이른 바 선구자로 육아휴직 1년을 다쓰고 나면 퇴사 결심을 하고 최후적으로 쓴 것이고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

홀벌이 부부의 가장으로 부인은 출산 후유증, 첫 아이 때 1년 휴직을 하고 둘째 아이 출산 뒤 5개월 연장하여 1년 5개월을 육아휴직 하였다. - (I씨 사례)

외벌이 부부의 가장으로 1년 5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보낸 I씨는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회사에 갇아야 할 기여금, 의료보험 기부금, 개인적 빚을 지는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선택한 육아휴직

출처: 강혜경(2013).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여성학 논집, 30(2), 133-16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 정책 대안 2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전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 정책의 한계 3

주관적 인식변화보다 객관적 환경변화에 치중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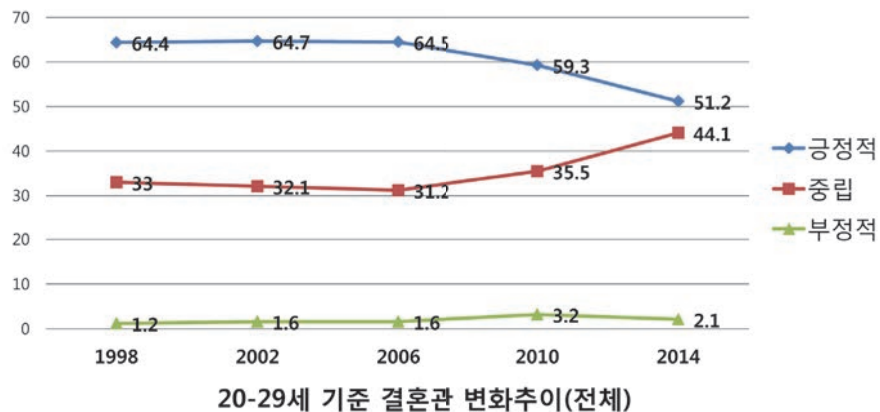
-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나 이는 반드시 가족의 가치 및 자녀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인식제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우리사회 미혼남녀의 자녀관과 결혼의사는 아직 긍정적

미혼 세대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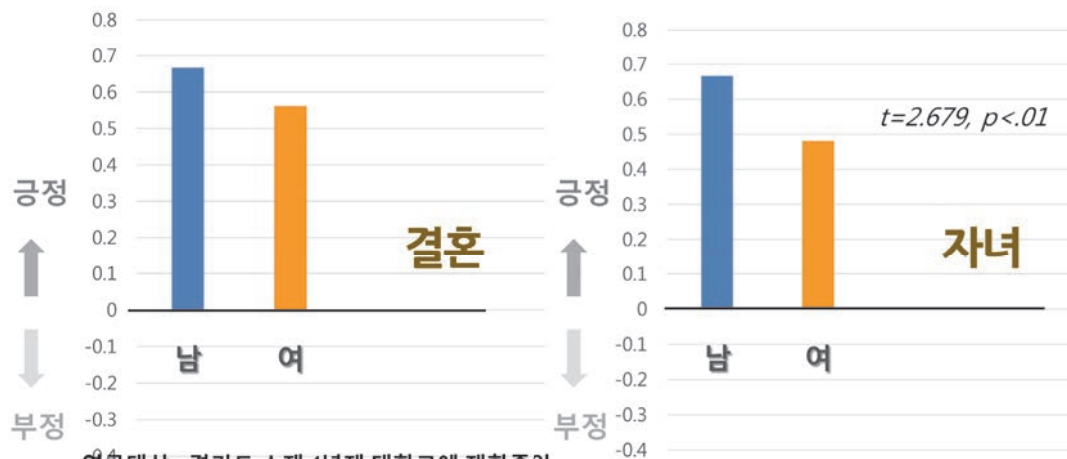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 인구교육을 도입할 필요 있음



대학생들의 암묵적 인식

2016. 9 조사



- 연구대상 :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102명 (남: 43, 여: 59)

- 측정도구 :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는 컴퓨터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 측정으로 무의식적이고 내현적인 태도 측정.

대학생들의 결혼 계획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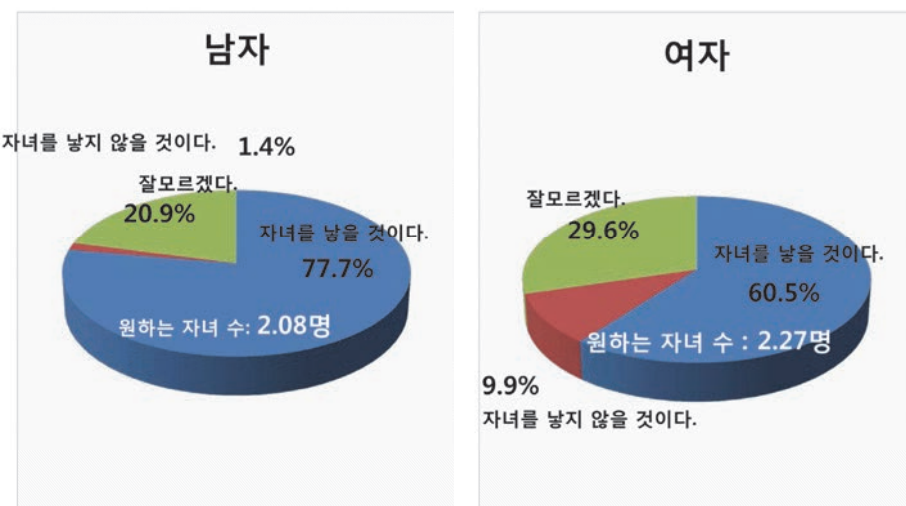
2016. 9 조사



- 연구대상 :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02명(남: 149, 여: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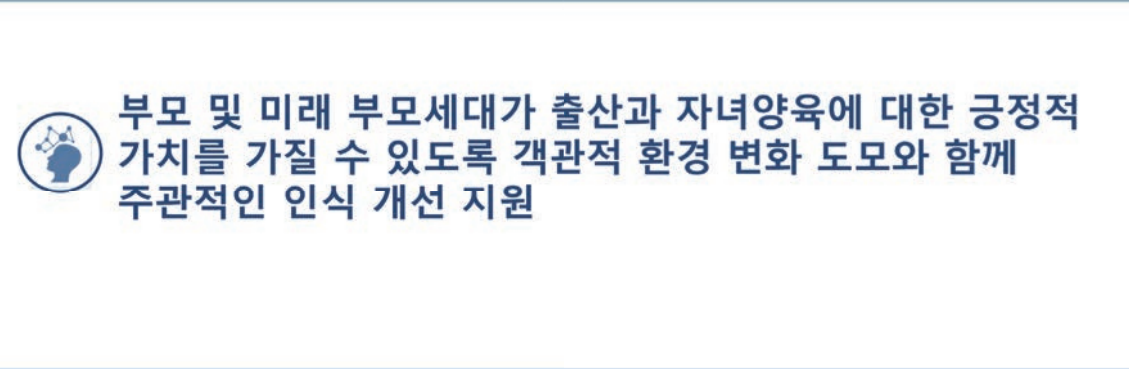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자녀 계획 조사

2016. 9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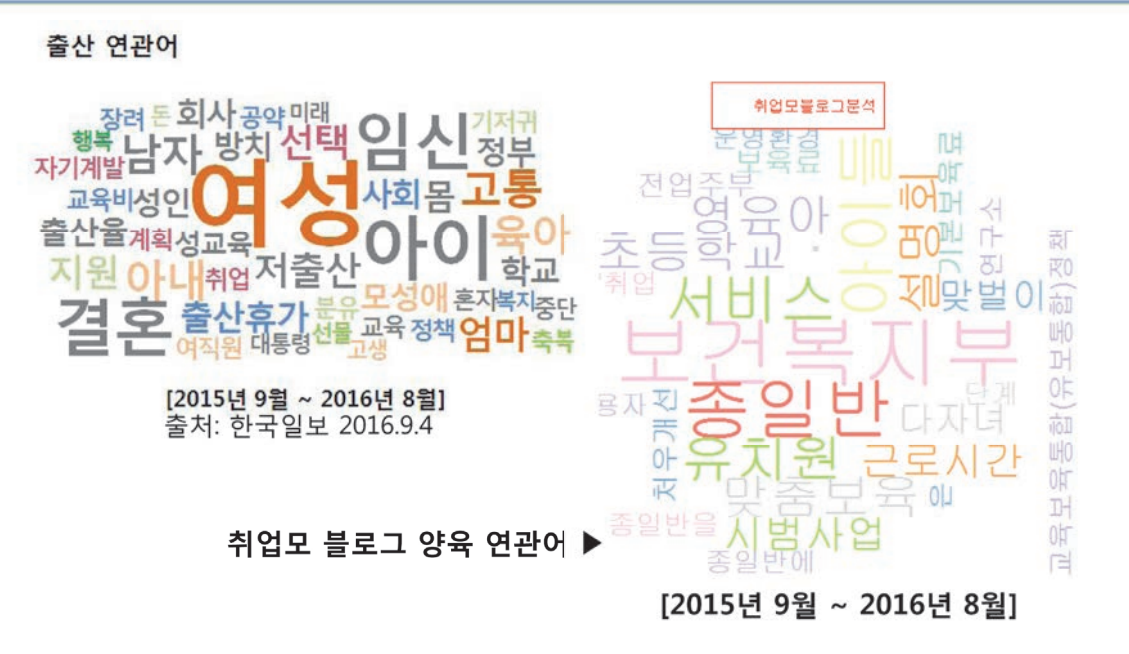


- 연구대상 :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02명(남: 149, 여: 15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 정책 대안 3



**자녀양육 보람, 소중함보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강조
양육역량 관심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가가 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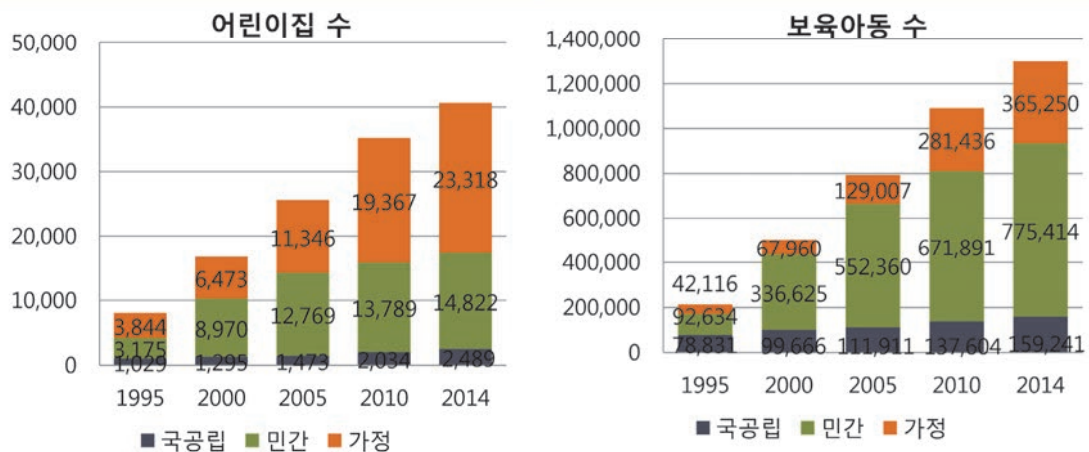
영아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이유

(부모 설문)

	1순위 	2순위	3순위
2009	사회성발달/부모 대리보호 (29.0)	-	전인적 발달 (28.5)
2012	사회성발달 (32.4)	전인적 발달 (22.2)	부모 대리보호 (18.0)
2015	전인적 발달 (33.4)	사회성 발달 (27.1)	부모 대리보호 (20.3)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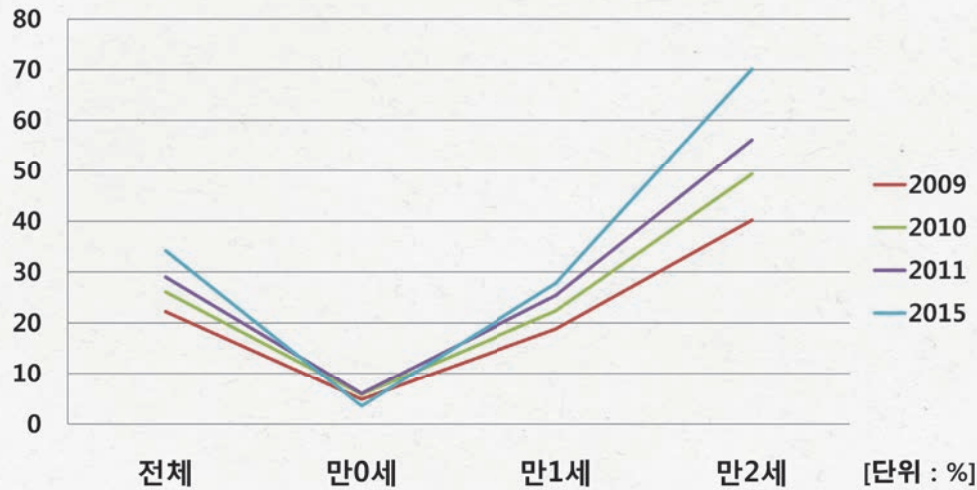


1995년에서 2014년 사이

-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모두 약 2배 증가
- 민간 어린이집 수는 약 5배, 보육아동 수는 약 8배 증가
- 가정 어린이집 수는 약 7배, 보육아동 수는 약 9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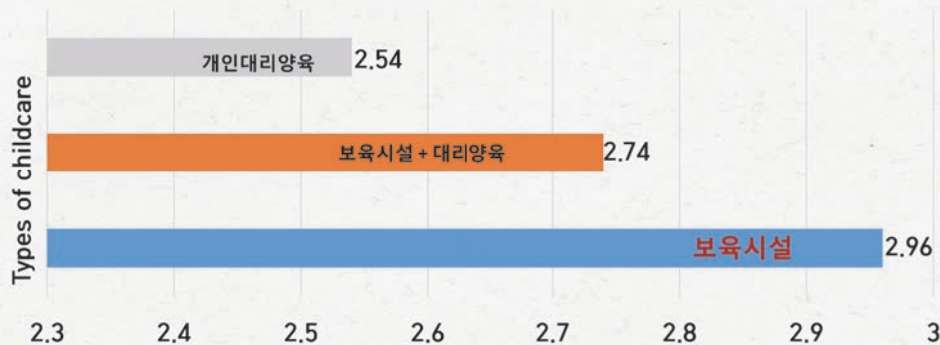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국가승인통계 제 15407호,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출처 : 보건복지부(각년도)「보육통계」, 교육부「교육통계」

취업모의 대리양육형태별 양육죄책감



기관 이용비율이 높을 수록 취업모의 양육죄책감은 높음
기관 이용을 장려하는 저출산 정책이 수정되어야 함

출처: 정유진, 전귀연(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대리양육 유형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타인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4), 673-691.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영유아 한달 양육비 100만원...

2016-02-29 18:55:32, 서울=뉴스1

35살 미만 기혼여성 절반 "경제적 부담에 둘째 출산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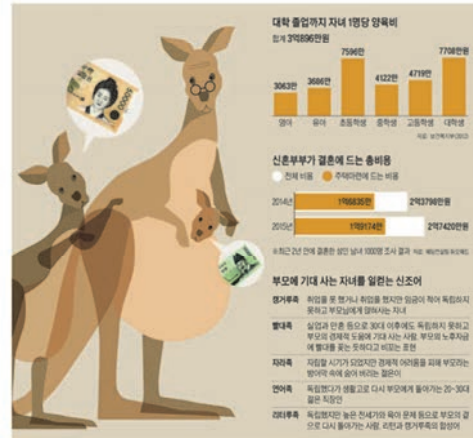
2016-07-10 21:30, 한겨레신문



육아 경제가치 한달 평균 227만원,
하루 6~9시간

양육 심적·경제부담 가장 커

2016-07-22 09:27:08, 세계일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 정책 대안 4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구성하고 부모권과 부모역량을 제고하는 인구 및 가족교육이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 정책의 한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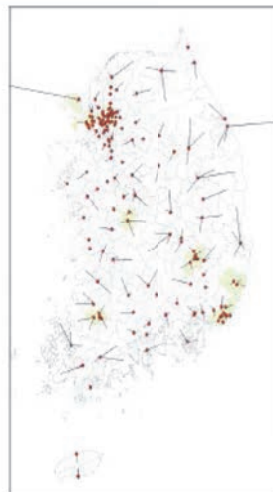
수혜자 입장의 정책평가 부족으로 접근성과 활용정도가 낮은 육아지원 정책

- 임신, 출산,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다양성으로 각 정책을 홍보하는 통합된 창구가 필요함
- 특히 수혜자가 손쉽게 정부의 다양한 다양한 저출산 지원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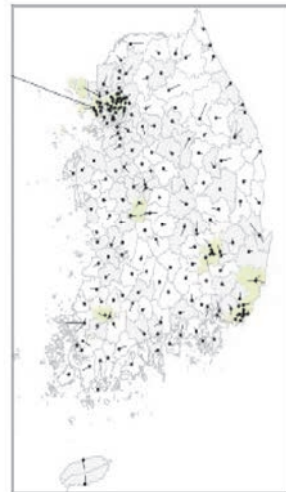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우
시 지역보다 군지역의 접근성이 3배 정도 떨어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출처: 이소영, 김은정, 조성호, 최인선(2015). 임신, 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에 편중된 인프라: 보육반장 사업

(One Stop) 원-스톱 서비스: 보육코디네이터

- 2013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
- 현재 132명(자치구별 4~7명)
- 맞벌이 가정, 출산·전입가정,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 대상

구분	역할
우리동네 보육반장	동 단위 육아관련 정보 취합 어린이집 정보안내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소통 지역돌봄 활동가의 역할
전문보육 코디네이터 역할	지역의 육아관련 자원관리와 체계화 우리동네 보육반장 관리 육아전문 상담자의 역할 돌봄 공동체 지원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소통

지역에 편중된 인프라: 공공어린이 도서관

지역별 공공어린이 도서관 수의 변화

지역	2010	2015
강원	0	1
경기	21	26
경남	3	6
경북	0	1
광주	2	2
대구	3	4
대전	1	1
부산	2	3
서울	11	21
울산	0	3
인천	8	9
전남	1	2
전북	0	2
제주	1	3
충남	1	3
충북	54	89
전체	54	89

- 공공어린이도서관 수 2010년 54개에서 2015년 89개로 약 1.5배 증가
- 2010년, 2015년 모두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음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2010년, 2015년 자료

영아모 취업율 대비 어린이집 수요 예측 평가

‘만 0세’ 어린이집 입소 가장 어렵다...수요 30%인데 이용률 14% 그쳐

전국 어린이집 이용 수요율 (단위: %)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보육 수요	30.1	74.7	84.7
이용률	14.2	63.4	85.2
추가 수요	15.9	11.3	-0.5
	공급 부족		공급 과잉

자료: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취업율은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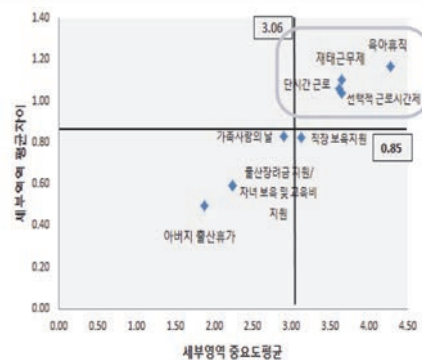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세계일보 사회일반 2016.8.2

아버지들의 회사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요구도 분석

영역	문항	요구도	요구도 순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아버지 출산휴가(3-5일)	1.88	8
	육아휴직	4.28	1
	출산장려금 지원	2.24	6
	자녀보육 및 교육비 지원	2.24	6
	직장보육 지원	3.13	5
탄력적 근무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유출퇴근제)	3.65	2
	단시간근로 (수 40시간 미만)	3.61	4
	재택근무제	3.64	3
	가족사랑의 날	2.90	7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 조사대상: 경기도 소재 직장근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398명
- 조사 기간 : 2015년 9월 ~ 12월



** 중요도 평균이 높고 중요도와 활용도
차이의 평균도 높은 1사분면에 있는 것이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적 제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

- N=398명
- 조사 기간: 2015년 9월 ~ 2015년 12월

		점수평균
영역	문항	M(SD)
회사의 가족친화적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	2.45(.79)
	복지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2.77(.75)
조직문화	조직의 관리적 지원	2.60(.61)

- 임산부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회사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해서 설문
-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 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음
- '복지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평균이 가장 높음

❖ 많은 회사가 아직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자유롭게 복지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란 것을 알 수 있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녀양육 정책 대안 5



다각적인 정책효과평가와 수혜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수혜자 체감효과 증가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

1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확립

- 질 높은 시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 안심여건 강화
- 학생, 군인 등 보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2 공공·민간의 자녀 돌봄 여건 확충

-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 체계 강화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질 관리체계 구축

3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문제 개혁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구조·문화 개선
- 적성과 능력 중심 교육-고용 연계 강화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

1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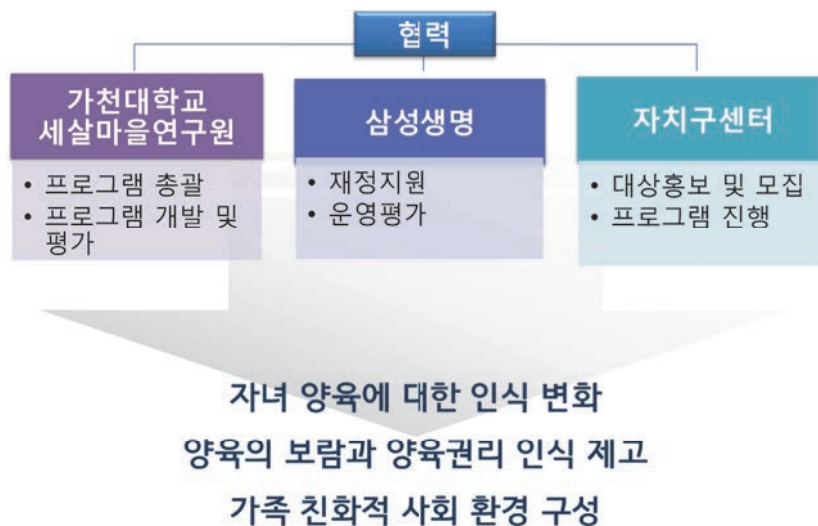
- 질 높은 시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 안심여건 강화
- 학생, 군인 등 보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지원 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사례 1

세살마을: 산-학-관 협력을 통한 양육 지원



사례 1

세살마을: 산-학-관 협력을 통한 양육 지원



양육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양육정보제공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감소
양육자신감 향상

양육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통한
후속출산에 대한 동기



저는 임신을 두려워하였고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잘 기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기도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세살마을 양육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오실 때마다 제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해주셔서 한줄기 밋줄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빠와의 교육후 남편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재혁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둘째 아이 언제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 세살마을 가정보듬이

세살마을 놀이보듬이 ▶



MEMO

MEMO

MEMO

MEMO